

제목: 노무현 대통령 인터넷 토론

인터넷을 관중하는 수많은 네티즌들과 청장년 실업자들을 앞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시작서부터 진행자와 농담을 주고 받는 등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량했다. 조금 토론이 진행된 후에는 "네티즌들 반응이 시큰둥 하면 우리 빨리 시장을 접든지 빨리 진행해 나갑시다"는 등 네티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시종일관 빈정대는 말투로 토론에 임해 시작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봐왔던 네티즌으로서 매우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청와대 민원실에 한마디 의견을 던지려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받는 사람은 없고 전화번호와 메시지만 남기라는 말뿐 며칠 몇달 몇년이 지나도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봉급받으며 나라를 다스리는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아질 수 없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대응해 올리는 글이 아니며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빈정대고 농담따먹기나 하는 정도라면 통치자의 수준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뜻이다. 아님 어떤 계산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네티즌을 무시하는~ 어떤것)

난 중간에 대통령이 계속 빈정대는 투로 토론에 임해서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외출을 나갔지만 사회적 함정의 피해자로서 일말의 희망을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실망이 크고 분개를 금할 수 없었다.

참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인가?

제목: 베트남처녀 상품화

나도 베트남처녀를 상품인양 취급하려는 결혼중개업소들의 태도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실제로 그런식으로 기사를 썼다면 돌을 맞아도 씹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국민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양태들입니다.

제목: 평택 데모

우리나라 왜 힘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국방력을 미국한테 의존해야 합니까? 이제 북한으로하여금 문호개방을 이끌어내어 동북아안보체제의 새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념대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실있는 국방력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북한 등 다양한 국가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자주외교, 외교안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노무현 정권 심각합니다. 댓글

MBC는 믿을만한 곳이 못되고 포탈은 믿을만한 곳이다라는 특정한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행태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도 체제는 지지하지만 네티즌저널리즘은 지지하지 않는다"와 같이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마술같이 섞인 카드를 보여주는 언론들의 행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언론이 왜 월드컵에 열광하면서도 인터넷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째서 그 폐해만 지적하고 있는지 왜 포탈은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그 저의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토론인프라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미 기존 매스미디어는 과거 항수에 젖어 자신들의 언론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체제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거처럼 자신들의 입김을 강화해나가려 할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호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력과 매스미디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다름아닌 국민들 편에 선 네티즌의 목소리란 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네티즌 목소리는 정말로 전국방방곡곡 울려 퍼질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각종 포탈에 산재해 있던 블로그가 하나둘씩 反네티즌세력에 의해 편집되어 그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축적 불가능한 이런 게시판만 남게 되었지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인터넷문화 측면에 있어서나 크나큰 퇴보입니다. 오히려 반네티즌세력의 저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제 포탈 블로그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열렬블로거의 목소리는 태풍의 핵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게 폭발해 과거처럼 태풍의 화오리처럼 여론의 주도세력으로 불쑥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네티즌의 목소리가 가장 정직하고 믿을만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진단하는 매스미디어와 포탈의 구조적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전에 제가 여러번 댓글로 구술한 적이 있지만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매스미디어나 포탈이 마술같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카드 중에 어느것은 진짜이고 어느것은 조작된 것인지 구별할줄 아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란 것이 원래 가짜와 진짜를 섞어 여론을 원하는 쪽으로 이끌도록 지금까지 진화해왔기 때문에 미디어를 바라보는데 있어 이같은 관점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요근래 한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북한 미사일시험발사 보도에 있어서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과 "미사일 시험발사"라고 구분해서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도해 버리면 어느대상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건지 국민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매스미디어는 인터넷을 믿을수 없는 언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마술이 진짜라고 선전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제목: 노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창출만으론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복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직업수행이 가능한 사람들의 얘기가구요 일자리 창출도 그나마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제대로 취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적 취약계층을 위한 거국적이고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올릴 문서3.txt

지금은 일자리 만들어 줄테니 니가 알아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벌어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식의 발상으로 이런 취약계층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목: 윈도우 해킹과 보안

난 지금까지 그 많은 패치 다 깔고 백신 설치했지만 근본적인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많은 작업들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작업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까지 든다. 이미 많은 해킹경험을 당했고 그런 일들이 컴퓨팅생활을 불신감으로 가득차게 만들었다.

제목: 노무현 조카 사행성 게임 연루

어제 뉴스를 보니 조카가 성인오락실 게임기 회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미를 제공할만 했더군요. 적어도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며 이름값은 하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중요한건 이제부터.. 이런 사행성 퇴폐산업을 뿌리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애지중지했던 조카가 있지만 이 놈이 삼촌을 속이고 방자한 짓을 도맡아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노대통령님도 그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노대통령님이 진정으로 퇴폐성/사행성 성인오락기 사업을 뿌리뽑을 의지가 있으시다면 휘하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관련법안을 입안하여 개정하고 청산작업을 마무리해 다시는 망국적인 성인오락실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실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카에게 했던것처럼 노대통령님도 그렇게 하셔야 국민들도 노대통령을 믿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도 조선일보와 수구세력들이 조카와 노대통령을 결부시키려 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외삼촌인 저는 조카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허나 조카는 그 뜻을 여러번 저버렸습니다. 노대통령께서도 노대통령 조카에게 깨끗한 오락문화를 위한 따끔한 일벌백계를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방금 인터넷에서 MBC뉴스를 보았는데 국회문광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연루됐을지도 모르는 상품권발행 및 관계법령 입법에 관해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주장하더군요.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습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는 또한 문광부, 영등위(영상등급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돼 있는듯 보이니까 그 고질적인 인허가 비리도 제대로 척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허잡한 글들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구요.

제목: 사행성 게임기 운반

공무원들이란게 다 이렇다니까...뻔뻔하고 잣대 들이대며 책임회피하고 조직적으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데다 인허가로 뭐 챙길것 없나 그 궁리만 하는 자들... 이 중 틀린말 있나요?

제목: 법사위 개혁법안 계류

정말 심각하네요. 국회의원들 좋은데에다 힘줄 써보세요. 맨날 줄속으로 법안 처리하지 마시고. 줄속처리하는 여전하다고 들었는데 계류중인 법안도 무지 많구요, 우리 제대로 합시다.

제목: 자유게시판에 왜 주민번호?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게임업주들이 많은것 같군요.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주민번호 입력받는 영등위도 맘에 안들고 여기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업주들도 맘에 안드네요. 전 어제 문광위,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에 전화해서 목소리를 외쳐가며 도박산업을 퇴폐성과 비리를 지적했습니다. 이젠 자신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국민을 생각해서 자중합시다. 적법한 청산절차를 밟으세요.

제목: 아동음란물 소지 처벌 제안

정말 어이없는 제안이군.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해서 슷처녀 슷총각이 널린 세상에 결혼한 여자가 아동포르노를 논해. 어이없다. 이 우주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합시다.

— —

제목: 바다이야기 책임

이번 방송 언론들의 취재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막 성장하려고 하는 순간 시의 적절하게 튀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무성한 비리이야기는 언론에서 비취지는 것보다 많이 확대보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리는 성장할때도 도사리지만 최고조점에 도달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렀을때 숨어들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행성 게임의 확장을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취재의 의미가 있죠.

제목: 차량내 공기 정화

차도옆 인도의 공기가 형편없이 악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량내 공기가 정화될수 있겠습니까? 당국은

생색만 날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목: 일본인과 교류

이게 바로 언론에서 비취지지 않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우러나는 참모습인것 같다. 오랜만에 뉴스같은 뉴스를 접해서 참 반가웠다. 우리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나무를 보지 말고 실생활에서 접하는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제목: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

요즘 뉴스에 대한 지적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도 재정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한 다음에 언론에 대해 이런 것들을 요구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정부 세출이나 세입구조를 전산화해서 부처별로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면 한점의혹이 없겠죠.

제목: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소액수의계약을 상향조정 한다" 그것도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군요.

가뜩이나 말이 많은 수의계약이 더 금액이 붙었으니 좋은 소식만은 아니네요.

제목: 오만한 북한정부는 들어라.

아래는 오늘 낮12시에 방송됐던 MBC뉴스의 보도내용이다.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 체제 당국자들의 이중성과 배은망덕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떠들고 나서는 정작 ABC기자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뻔뻔한 이중성과 협박, 정말 그 체제 당국자들의 부도덕성과 교활함에 넋덜머리가 난다. 지금까지 남한이 북측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온갖 비료 및 식량, 시멘트, 전기 등 수조원에 달하는 대북물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북한 장성이 했다는 것은 남측을 민족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전략적이고 이용가치가 있는 이웃국가로밖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본 필자는 북한의 불량한 대남정책에 분명하게 분노하는 바이며 이는 차후에 있는 UN제재 및 남북협력사업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UN제재를 통해서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북한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어선 아니되며 상기와 같은 인식이 깔려있는 북한당국자들에게 어떠한 물자도 일방적으로 지원되어선 아니된다고 본다. 이젠 금강산사업도 철저한 수익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을 따져서 존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개성공단 사업은 협력사업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에 북한이 남측에게 어떠한 핵도발의 위협이나 발언으로 경거망동을 한다면 남측도 그에 상응하는 핵핵우산이나 자체 핵개발로써 그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북측 장성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날 거라고 언급한 이상 핵우산이 불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핵개발에 남측도 발빠르게 착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핵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핵억지력에 문제가 생긴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체제당사자들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서 비롯된다. 언론의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말이다. 이젠 남측도 죽음을 불사하고 북측의 오만한 도발적 언행에 일대일 대응해야 하며 전쟁이 핵이든 무엇이든 상호억지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군사력 균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체제당사자들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앞으로 경거망동을 삼가고 주변국들의 심사를 건드리는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는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북이 핵을 만약 남측에 사용한다면 북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점 명심하길 바란다.

=====

"굴복 강요시 전쟁"

2006. 10. 20

● 앵커 :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북한군 장성이 밝혔습니다. 굴복을 강요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진숙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리찬복 북한군 상장은 북한에서 취재중인 A B C 기자에게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굴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 : 리찬복 상장은 이어서 어디서 전쟁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 상장은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는 말을 중단해 달라면

서 이는 북한국민 모두가 부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즉각반응을 보였습니다.

● 기자 : 스노우 대변인은 이어서 지역이 전쟁 직전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제재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간 말의 전쟁도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공방과 함께 북한 정권교체론까지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 B C 뉴스 이진숙입니다.

[세계][뉴스투데이]이진숙 특파원

제목: 한미 FTA 체결시 주의할점...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철저한 소비자보호 대책이 주문되지 않은 상황에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그 많은 반대론자들이 역설하는 '위험한 체결'이 될지도 모른다.

이같은 점을 명심하고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검하며 협상에 임한다면 분명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를 위한 FTA가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FTA, 협상은 하되 준비는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제목: 일잘하는 정부란...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제목: 누리꾼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야후 뉴스에 가보니 온갖 콘텐츠들에 "누리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누리꾼 용어 사용의 거부감을 서술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다니 정말로 한심하고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티즌" 말살어 정책의 일환인 "누리꾼" 용어를 포탈들이 지속적으로 써 온것에 반대하여 제가 야후회원도 탈퇴하면서까지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포탈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야후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내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것 자체가 국내 정보통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음모가 깔려있는건 아닌지 심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누리꾼"이란 용어는 거북하오니 "네티즌"이란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안 국무회의 통과

다시한번 말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여 그 위원장과 위원(5명)으로 방송과 통신업계를 주물러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차기정부에 임명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다. 법이야 때에 따라 개정하면 그만이고 중요한건 국민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인데 지금의 방송도 어용이란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통신업계까지 제어하려 든다면 여론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겠다는 속내 아니겠는가? 국회 통과가 남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기분이 드는게, 이런 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는게 무지하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국회마저 한통속이 되면 이걸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속보이는 짓이 되고 말 것이다. 어쨌든 누군가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제목: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난 요새 TV나 포털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부입장과 다른 과격하고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그네들이 생산하는 보도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렸다. 뉴스가 과거와 달리 현격하게 그 품질이 떨어졌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꼭 정치여론을 방송국이 지지하는 입장 쪽으로 보도를 짜맞춰 나가는데 정말 염증을 느꼈다. 앞으로 방송뉴스와 포털미디어에 대한 흥미상실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 같다. 이것은 TV나 포털미디어가 자초한 일이다. 신뢰가 한번 상실되면 그건 만회되기가 좀처럼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보도는 결국 스스로의 자멸을 자초하는 일이다.

제목: 행정복합도시...

어떻게 된게 행정복합도시가 홈페이지만 번듯하고 기획안과 점점 멀어지는것 같네요. 묘지공원부터 짓질 않나 대학신설도 없다고 말하질 않나... 정부와 건설청 여러분, 정신좀 차리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제목: 고정리 종합장례단지 계획에 대하여...

고정리에 종합장례단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주변동네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의견드릴게 있습니다. 연기군 남면 1번 국도에서 화장터까지 운구하는 차량은 지하터널이나 전용차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소통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동네 앞으로는 아예 운반할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향후 도로 설계시 이점을 적극 반영 바랍니다.

제목: 2006년도 정신건강촉제 개최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어느 한쪽이 정신장애(정신분열증)를 겪을때 다른 한쪽도 정신장애를 일으킬 확률은 50%란 얘기를 어디서 들은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신체적 요인 50%와 외부의 환경적 요인 50%가 작용한다고 설명할수 있겠죠. 이 사회의 정신장애자들은 어떠한 장애보다 이기기 어려운 치명적인 정신적 불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그렇게 만든 외부적 환경과 목숨을 걸고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도전은 위대한 겁니다.

제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부부의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다른 일방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권리 및 그 대지 또는 그 대지에 대한 권리
2. 다른 일방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②부부의 일방이 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하여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및 제1항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제1항의 주거용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이에 동의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행위를 한 부부 일방에 대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1조의3(혼인 중의 재산분할)

①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부 일방의 동의 또는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8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

2. 다른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

4. 부부가 2년 이상 별거하고 있을 때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83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제839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제406조제1항에 따라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3조의2(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결정) 가정법원은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정한다.

제909조제4항중 “離婚한”은 “이혼하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제912조의 제목 “(친권행사의 기준)”을 “(자의 복리의 원칙)”으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2조(자의 복리의 원칙) 친권의 행사와 친권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 다만, 제8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덧글>

이윤찬 2006-12-07 23:06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재산을 확일적으로 반반으로 나누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법적 편의성을 위한 잣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심려 깊은 판단을 하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죠.

제목: 다시한번 우리교육을 말한다

1.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까지도 시험위주의 선발방식이 팽배해 있다.

한달에 30~40만원씩 하는 아이들 학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비롯해 사회과목까지 모두 실사구시의 교수법이 아닌 주입식 암기교육에다 매번 쓰잘때기없는 온갖 시험들로 점철돼 있다. 해마다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대입수능이란 골치아픈 시험에다 논술과 같은 시험에서 웃지못할 문제들이 어김없이 출제되고 있다. 사회에 나오면 토풀이란 시험으로 꿀먹은 벼어리의 영어교육이 활개를 치고 종전 에 서술한 각종 공무원 시험은 사회가 시험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풍조를 양산해 내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방침은 사교육을 없앤다고 떠드는데 이렇게 공무원 선발방식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쪽으로 전형기조를 고집해 나가니 이젠 엄연한 이중적 행태이며 사회가 사교육에 미칠 (crazy)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

2. 시험위주의 선발방식이 가져오는 피해를 잘 모르고 있다.

이제는 기성권력의 돈있는 자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시험에 잘 적응해서 권력세습의 룰을 고착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즉 서로 경쟁해서 앞서나가는 사람만이 직위를 얻고 뒤쳐지는 사람은 밑바닥 생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단 얘기다. 더불어 적성을 계발해 나가고 더불어 좋은 직장에도 고용될 기회를 얻는 형태가 아닌 학원에 돈을 많이 상납하는 사람만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가 넓어진다. 남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고 보자는 식의 인성이 무너진 형태가 우리 사회 교육구조이다. 시험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우리사회 엘리트층과 양극화되고 시험에서 통과된 많은 수의 사람들도 또다른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학원과다른 직장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사회적 양극화가 대립을 부추기게 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저출산이 이어지고 이것이 나중 에 고령화로 귀결된다.

3. 이 사회를 지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자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형편없다.

고위공무원들이 다 인문쪽 출신이고 기술에 대해선 문외한이다보니 기술계 쪽의 능력있고 합리적 지식의 소유자들을 멀리하거나 이들의 대우가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얼마전 고위공무원의 기술계 관료 대거 기용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새 흐지부지 되었으며 실제적인 기용인력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직무상 질병이 발생해도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보수가 나오는 반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수많은 장애인들은 질병이 있어도 보상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바로 관료들만 배불리 먹고 백성들은 고통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4. 학원이 망하고 시험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산다.

학원이 망할려면 사회의 인재선발방식이 획기적으로 첨단화되어야 하며 이제 시험을 못봐도 공직계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고 하면 학원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사교육비의 효과가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유발효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전인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성교육은 땅에 떨어졌고 특기적성교육이나 특별활동 같은 것들도 주변교육으로 밀려나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개혁을 말할 수 있을까?

5. 정책적 마인드를 가진 IT기술자들의 특채를 법제화하고 대통령부터 컴퓨터의 잠재력을 이해해야 하며 공교육에 있어 컴퓨터와 인터넷의 가중치를 크게 늘려야 한다.

이젠 기성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청렴성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과학/정보 영역에서 관련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내야 한다. 또 학교교육과정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의 비중을 늘려 무한한 정보의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능숙한 산업인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사회는 모든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능력이 부과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무능력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쓰잘때기 없는 학원교육은 이제 접어야 할때가 됐으며 기술위주, 특히 컴퓨터 위주의 교육

과 인터넷 정보습득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모든 지식과 정보가 집약돼 있는 새로운 세계에 능숙한 현대인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풍토를 다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육, 우리 사회가 자꾸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까요? 무능력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덧글>

물론 대학들이 시험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여러가지 교육정상화 노력을 폄하하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대학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얼마만큼 교육계 내부의 개혁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신중히 반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십년전과 똑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필답고사가 성행하고 있고 입시와 내신에서 출세우기가 전형요소로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란 것은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보급으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미 중간선거 한국계 잇달아 당선

말씀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쓰신것 같네요. 미국 정치계에서 한인들의 입김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미외교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것 같네요. 그게 양국의 이익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해를 줄이는데는 최대한의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제목: 대통령임기말, 국정원과 언론의 줄서기...

요사이 국정원에서 불거진 뉴스를 방송들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어려운 핵문제 사태속에서 화해정책을 펼쳐왔던 청와대로선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수없다.

그래서 내부단속겸 국정원장이 교체되고 소폭의 개각이 있었지만 이런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협화음, 또 언론의 식상한 색깔론 특필은 예전서부터 죽 있어왔던 전형적인 임기말 줄서기의 한 행태일 뿐이다.

대선구도가 여당한테 불리해질것 같으니까 지금에서부터라도 될성썩은 떡잎에 줄을 잘 서서 차후에 단행될 인사나 직책을 보장받겠다는 알팍한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있는한 나라의 미래나 발전은 없다. 그들은 나라의 흥망엔 관심이 없고 단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눈앞의 작은 기득권에만 급급하여 일을 그르치는 미꾸라지같은 존재다.

어제의 뉴스를 보니 민노당이 평양에 도착한 소식은 잠깐 보여주고 그 뒤냐 60년대애나 있을 법한 '공작원'과 '간첩'이란 용어를 남발하며 지겨운 색깔론을 펼치는데 두 눈뜨고 못봐주겠더라. 이젠 다양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 그것을 바라보는 언론과 미디어, 그 속에서 일하는 당직자들의 이해관계, 북한 체제와 우리 체제의 속성등 여러 구조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지 않으면 이들의 어설픈 공략에 말려들기 쉽상이다.

이젠 제발 공무원을 비롯해 미디어의 속보이는 줄서기는 사라졌으면 싶다. 우리는 그 점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목: 긍정적인 생각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의 효용성에 대해 듣곤 한다. 건강에 좋다든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단런지... 오늘도 아침경제뉴스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뉴스가 또 흘러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사회에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려 있고 부조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면은 세상에 가장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것저것 신경쓰지 않아도 될 만큼 긍정적으로 변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숨은 곳에서 부정적인 사회의 면면을 파헤치는데 집요하게 앞장섰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제목: 공무원들의 압搾함. "어디신가요?"

내가 요사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많이 들르고 질문과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꼭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해 성공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멘트가 "어디신가요?"이다.

그래서 필자가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멘트가 민원해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어디신가요?"는 "당신은 힘있는 기관의 소속인가요? 힘없는 개인 소속인가요?" 를 묻는 질문이다

란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전화로 아무리 애원을 하고 몇번을 건의해도 묵살해 버리고 관심밖에 두는 공무원들의 근무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것이다.

국민중의 한사람이 공무원에게 용건이 있어 전화를 했으면 그것이 언론이든지 힘있는 기관의 소속인이든지 아님 진짜 국민의 한사람인지 상관없이 성실히 전화에 응해야 하는데 민원이라도 올릴라치면 소속부터 묻고마는 압살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정말 이제 년절머리가 난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젠 제발 그런 잔머리는 집어치우고 정말 힘없는 국민이 힘들게 용건이 있어 전화를 했으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국정에 반영했으면 싶다. 일개 국민이구나 하고 건의를 묵살하거나 차일피일 민원을 미루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이란 얘기다.

국회를 비롯해 여러 관청을 돌아다녔지만 진정으로 진지하게 개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관리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 전화받으면 남녀 가리지 않고 10의 8명은 빠지지 않고 하는 말 "어디신가요?"

병시늬들 알아서 뭐하냐? 용건이 있어 전화했는데 무슨 소속? 그 10명의 8에게 솔직히 얘기해주면 돌아오는건 싸늘한 반응뿐이니 누가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겠나 이 바보들아~ _ _ _

주) 여기서 싸늘한 반응이란 겉치레(예의상 보이는 형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건의나 민원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제목: 국민들 입법과정 참여

입법과정의 참여를 공약하기에 앞서 이런 국정브리핑 같은 홍보매체에서 국민들의 의사소통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기사마다 네티즌의견을 막아놓은 경우와 열어놓은 경우를 다르게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준히 전로부터 제기했던 사안인데 아직 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네요. 언제쯤 약속하신 부분이 개선이 될런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너무 질질 끈다는 인상이 짙네요. 슬슬 짜증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로 꽂꽂 문쳐있네요. 어서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입법과정도 아울러 원스톱으로 예고단계에서의 의견수렴 및 반영절차가 들어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정부입법과정과 별개로 나뉘어 있어서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제목: 정규수업에 논술교육 강화

말에 최혜영님, 네티즌(국민)은 누리꾼이 아닙니다. 자꾸 기자들이 만들어가는 네티즌 이미지 바꾸기에 거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가 당신보고 "알림꾼"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말 쓰지 마세요. "누리꾼"이라고 기자들이 쓰자고 합의했다는 사실도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괜한 오해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논술교육내실화방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공교육이 입시와 시험위주로 운영되고 있는한 바람직한 논술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논술은 단순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실습에서부터 출발하는 산교육의 산물입니다. 시험지로 길들여진 학생의 머리에서 멋있는 인생철학이나 훌륭한 가치관, 올바른 사회인식이 나올 거라고 본다면 무리겠지요. 과거 수십년간 저질러온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요사이 청년 실업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나만 잘살고 잘먹기 위해 가르치는게 아닙니다. 더불어 잘살고 잘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지요. 즉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목: 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열우당을 지지하느냐 한나라당을 지지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 딴생각을 품으면 그걸 지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게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상대방을 헐뜯고 뭉개는걸 찾아내 서로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건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그것도 35개를 억지로 생각해 내어 이런데에 올리는건 정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열토당토 않은 논리에 일일이 대꾸는 하지 않겠지만 열우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한가지 참고로 알아둘것은 당신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할만큼 이 사회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글이나 쓰며 올릴때 사회개혁에 적극적인 누군가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민심을 애써 살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공감하고 실제적인 대변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지 자신이 고행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란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배은망덕한다면 이 사회에 필요한 어떠한 형태의 봉사도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봉사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 주셨음 합니다.

----- dodohehe님의 원글 내용입니다. -----

>열린당 지지자와 노사모의 특징 35가지

>

>1 대부분 가난하다. 자기가 가난한건 절대 자신이나

>부모 책임이 아니며 100%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2 그러나 자기보다 더 가난한 놈들은 게을러서 그런거다

>

>3 아주 가끔 부자도 있지만, 실력으로 번게 아니라

>늘 불안해한다 언젠가 다시 가난해질 때를 대비해 가난한

>이들에게 잘 보이려한다

>

>4 부자들은 전부 다 친일파 후손이라고 욕한다.

>지네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한 줄 안다

>

>5 우연히 할머니한테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직업이

>일본인 거주지역에 서 똥 푸는 일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운다

>

>

>6 대부분 삼류대학 출신이다,라고 말하면 흥분해서 "일류,

>삼류의 기준 이 뭐냐"고 반문한다.그게 바로 삼류대학

>출신이라는 증거다

>

>7 극소수는 외국 학위 취득이라는 '패자부활전'을 통과했지만

>국내에서는 시드 배정을 못 받아 일류대에 대한 더 깊은 원한을

>갖는다

>

>8 그들은 성공회대, 한신대 등의 삼류대에서 교수짓 하면서 신문에

>'한나라당 뽕큐칼럼'을 500번 쓴후에, 열우당 의원집에 갈비세트 150번 보내고,

>마누라가 설거지 빨래 애보기 각각 620번 해주고 나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다 (대표적으로 김재홍)

>

>

>9 재벌을 욕하기위해 노동자를 위하는척 하지만, 내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job sharing할 생각은 커녕 단돈 만원도 양보못한다

>

>10 그런 요구를 비정규직이 하면, 수구세력의 음모라고 몰아부친다

>

>11 파업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하지만, 전철운행이 중단되면

>누구보다 거칠게 욕한다

>

>12 입만 열면 강남부자들 부동산 투기를 욕한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 당첨 하는날

>마누라가 늦잠자면 개 패듯이 패서 보낸다 (부적도 쥐어 보낸다)

>

>13 전라도가 많다 그러나 자기는 전라도가 아니라 서울 토박이라고

>말한다. 부모 고향을 물으면 묵비권을 행사한다

>

>14 전라도에게 열우당은 돈많은 새아빠다 진정 사랑하기보단 먹고살기 위해

>같이 산다. 울고있는 가난한 친아빠 민주당은 애써 외면한다

>

>15 5.18광주사건이 폴포트 킬링필드나 피플파워 정도의 찬란한 민중사적 의미를

>지니는것으로 믿는다

>

>16 전 세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하면 화내면서도 실망한다

>

>17 한나라당은 미국의 노예라고 말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한

>대미자주적인 일 하나만 말해달라고 하면 깊은 생각에 잠긴다

>

>18 <수용소발언> <이라크파병> <한미FTA>등을 예로들면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한다

>

>19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위해 군복무가

>5년으로 늘 어나고 국방예산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건 죽어도안된다

>

>20 입만 열면 미국을 욕한다 심지어 조기유학보내는 딸내미

>비자 받기위해 미국 대사관 앞에 줄 서있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는다
>
>21 박정희를 다카기 마사오라 부른다. 김대중을 도요타 다이쥬라 부르면
>갑자기 도요타 렉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
>22 박정희는 여자가수들 불러 따먹은 놈이라고 욕한다 김대중이
>훈외정사로 낳은 딸을 버린 사실을 얘기하면 영웅호색이라고
>주장한다
>
>23 한나라는 친일파딸이 대표인 친일정당이라고 말한다.
>신기남 이미경 정동영 김희선등 기라성같은 친일후손이 있는
>열우당은 뭐냐고 물으면 자는척한다
>
>24 자는척 하는걸 깨워서 끝까지 깨물으면, 비굴하게 웃으며
>다 알면서 왜 이러냐고,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며 웅크린다
>
>25 노무현 뺨아놓으면 부자들 돈 뺏아서 나한테 나눠줄줄 알았다
>그걸 못하는 노무현이 증오스럽다
>
>26 이명박이 대선때 <가난한 성장기를 회상하며 눈물 흘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잠이 오질 않는다
>
>27 정동영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있다. 그렇다고 고건을 밀자니 살 맛이 안 난다
>
>28 입버릇처럼 "열린당에 실망해서 이번엔 민노당을 찍을거다"란 말을달고산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거란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
>
>29 지역감정은 <경상도만 버리면 된다>
>
>30 법은 나 말고 <다른 사람만 지키면 된다>
>
>31 <평등>이란 '나보다 잘난놈이 내 수준으로 떨어지는것'이다
>
>32 <자유>란 '나보다 못난 놈을 짓밟을수 있는 권리'이다
>
>33 <보수>란 '다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지는 것'이다
>
>34 <진보>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행복해 지는것'이다
>
>35 이 글을보고 영감을 얻어 <한날당빠가 사는방식>을 쓰기 시작한다

제목: 최근 기업공시에 관한 제안 하나.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금일 공고후 3일~3개월 이내에서 익일~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국내장으로 유입한다거나 자기주식(자사주식)의 익일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공시요건에 해당합니다.

허나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회사의 공시시스템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기업들의 공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경우가 다반사고 매일 확인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개별기업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기업에서 공시요건에 해당하는 신고가 들어왔을때 금융감독원이나 증권회사에서 사용자 이메일로 각 개인이 매수한 주식의 공시내용들을 이메일링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증권회사별로 기존 형태의 공시정보제공이 천차만별이 경우가 일반적이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신뢰성이 높은 반면 이런 개인화된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고 주주의 권리와자 주식회사로서의 필수적 의무인 기업공시가 지금과 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이메일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화하고 기존의 공시도 신뢰성을 높이는 쪽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주식시장도 한층더 높은 유연함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 담당자님들은 이 제안을 꼭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주식투자를 해보았던 개인투자자로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목: [댓글] 종부세 부과에 대하여...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희집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세금에 치중하고 분양가 규제같은 정작 중요한 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데를 가봐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대통령부터가 예전에 분양가공개는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고 공개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하여야 집값이 잡힐텐데 얼마전 분양을 시작한 판교부토도 주변시세를 뛰어넘는 고분양가로 서민의 내집마련꿈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택정책을 방치하고선 종부세 같은 세금건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굵지가 않은 거지요. 집 가진 저도 보기에 안스러운데 집없는 서민들은 얼마나 속타고 허탈하겠습니까? 그걸 아셔야죠.

종부세 걷는 건 좋은데 집값안정엔 관심없고 세금 걷는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명분이 약한 거지요. 지금 중수형아파트를 비롯해 대다수 아파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떤 곳은 가격만 높지 매물은 거의없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진정 집을 구입하려는 서민을 위해 분양가공개나 규제를 통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브리핑에 가보면 종부세에 관한 홍보기사가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런 노력을 집값안정에도 쏟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네티즌 2006-11-30 23:03

집값이 올라야 종부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분양가규제엔 관심없고 종부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듯 보입니다. 즉 종부세는 세대별합산 6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가계에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수록 많이 걷히는 셈이 되는 거지요. 좀 속보이는 짓을 뻔뻔스럽게 포장하고 있는듯 해서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제목: [댓글]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대비기금이기 때문에 요즈음 같이 독신 직장인들이 많은 상황에선 얼마나 많은 잉여기금이 생기고 예비율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나 야박하고 돈 독에 오른 정부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설립

해당 국무조정실 게시판

기존의 방송위원회의 업무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가업무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 추진될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구성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답니다. 대충 보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조와 2조의 취지대로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말고 국민 서로간의 원활한 정보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방송통신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정보통신의 진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과 통신의 이용자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정보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정보통신 관련 기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정보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정보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정보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목: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5546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의자 : 송영선 의원

찬성자 : 41인

주문

????

우리는 국방력 건설을 위한 해외 무기 구매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제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 등을 활용해 오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등 여러 이유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전체 무기 구매액의 80% 정도를 미국산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제5위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이다.

특히 한국은 자주적 국방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를 위한 대비 전력 구축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대 23억불 규모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무기의 주요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른바 ‘3등 국가’ 취급을 당하고 있다.

대외군사판매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공정과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은 상당한 홀대를 받고 있다. 즉 한국은 미국 군수산업의 발전과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군사판매 제도 자체의 문제는 구매국인 한국이 계약과정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제한적이며, 그 모든 것을 미국의 ‘선’에 맡겨야만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상거래의 과정과는 너무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대외군사판매 제도 이용국은 이의 불평등성과 불공정성의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은 대외군사판매 방식의 인가비용과 미국 의회의 무기판매 심의기준 등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가비용은 전체 대외군사판매 가격의 약 5% 정도를 차지하지만, 미국 의회가 정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의회가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에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이른바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인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무기 판매를 위한 심의기준 등에서 다른 그룹에 속한 나라들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군과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관련 상대기관 등에 대해 대외군사판매 방식의 문제점과 불평등성을 개선할 요구해 왔으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의회가 통제하고 있는 관련 법률에서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해 있는 한국의 지위가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양국 간의 국방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지위 향상과 대외군사판매 제도의 불평등성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및 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익증진을 위해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의 무기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성·불공정성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무기의 구매선 다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 대외군사판매의 무기 구매 절차와 방식을 재검토하여 상호 이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지위가 미국의회가 정한 기준에서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의회에 대해 미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 지위를 향상하고 상호호혜의 조건하에서 방산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및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적극 촉구한다.

제안이유

????

지난 10년간 (1997~2006.9) 우리의 무기 구매실적은 총 196억불로 이 중 81.4%에 해당하는 160억불이 미국산임. 이 중 대외군사판매방식 구매는 그 48%인 76억4,400만불이며, 우리는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량의 5%를 구매하는 제5위의 구매국임.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회가 정해놓은 대외군사판매 구매국 분류기준에 의하면, 가장 낮은 단계인 제3그룹(Major non-NATO Ally)에 속해 있음. 이 때문에 무기 판매의 절차와 대상을 까다롭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인가비용을 추가로 물고 있는 실정임.

이스라엘 역시 우리와 같은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6년 상반기에 이스라엘 국방성 및 의회의 노력 등으로 제2그룹(NATO+3)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바 있음. 우리는 그동안 이런 불합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군의 무기 구매부서 등에서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음. 우리가 미국의 비자면제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 군 및 행정부 그리고 국회가 모두 나서 힘을 모아야 함.

특히 우리 국회는 법령으로 대외무기 판매 등을 통제하는 미국 의회의 상대방으로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의원외교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제목: 국회의안통과에 대한 댓글

그리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최근에 국회에서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고 적극적인 의안들이 많이 제출되고는 있지만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의안이 지극히 적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류상태이거나 폐기되는 의안들이 엄청나게 많음을 실감하게 된다는 점이다.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댓글원본

제가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통합추진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존 방송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방송미디어를 견제한 것이었다면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입장에서 기존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여론 및 미디어를 관리하기 어렵게 되자 하나로 통합해 4명의 위원으로 손쉽게 방송과 통신업계를 견제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 4명의 권한이 실로 막강하므로 정부가 바라는 어느정도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해낼수가 있는 거지요. 통합되면 기구는 효율화 되겠지만 견제기능에 있어서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의 입장에선 좀더 다루기 쉬워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정책적 명분을 쌓기위한 포장기 심하다는걸 알 수 있으며 실제적인 통합효과는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되어 소수의 위원이 중요한 방송통신인기업무와 규제를 다뤄서 위원회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범위를 확장한 효과뿐이라는 것입니다.

제목: 식품유통기한폐지

식약청 보도자료 게시판

오늘 뉴스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식약청에서 유통기한제도를 폐지하고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다시말해 요새 날씨가 춥고 불경기이다보니 식품 재고가 늘고 그래서 이제는 식약청 공무원들이 업계를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이게 제도가 바뀌면 법적 구속력도 떨어지고 여름철같이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는 데 정말 식약청 공무원이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놓을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널 당장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해보고 언제 입법예고되었고 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었는지 차 초지정을 들여보아야 직성이 풀릴것 같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 듣고 어떠신가요? 음식의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아니면모 식의 탁상행정을 펼치는 정부당국자가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식약청이 불경기에 재고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들다니 한마디로 괴씸한 생각뿐이다.

아래는 식약청 해당 보도해명 전문이다.

=====

-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간장, 식초, 당류 등은 품질유지기한 표시가능 -

○ 식약청은 장기간 보관·유통하여도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표시 대신에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함량·수분활성도,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김치, 젓갈류와 같은 김치·절임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식품과 다류, 찜류,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등은 현행대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국내생산 및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량의 15.7%인 약 441만톤('05년 기준)이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

○ 현행 유통기한 제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유통·판매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 이러한 소비자 인식개선과 자원낭비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유통기한제도 운영을 위해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식품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거나 변질이나 부패우려가 크거나 품질변화속도가 빠른 제품에만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제품은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일본은 품질변화 속도가 빨라 5일 이내 소비되어야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품질변화 속도가 느린 제품은 상미(上味)기한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 미국은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 EU는 부패가 용이한 식품은 최종사용일자 표시로, 일반식품은 최소품질유지일자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부패·변질 등 위생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통이나 소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위생상 문제가 없으므로 식품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가격인하, 묶음 판매 등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해 질 것이다.

○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지를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목: 참여정부의 공과 실

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3. 정부가 생산하는 법규의 체계적인 정리, 對국민홍보, 한글화작업, 부처내에서의 공표 등 인터넷 안에서의 법제정비작업이 어느정도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참여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편리한 법제구축의 욕구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4. 노동부를 비롯한 각종 산하단체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업무능력 업그레이드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적시적소에서 필요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비록 실제적인 취업률은 만족할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인창업 등을 위한 직무능력향상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5.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 수많은 전산응용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물론 통계정보 같은 것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6.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도 정치와 언론,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비판적 긴장관계의 틀을 어느정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 노력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방송을 비롯한 특히 국내 주요신문들은 노대통령의 안좋은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대안없는 비난일색으로 지면을 장식했기 때문이다.

7. 마지막으로 과거사 청산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우리 사회 한맺힌 사람들의 소망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었다는 것과 여담이지만 대통령의 소탈한 권위가 어떤 것이라는걸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럼 이번에는 실(失)을 논해보자...

1.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적인 안정대책을 세웠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세금만 올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강력한 분양가 공개나 규제, 1가구 다주택 중과세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매의 제한 등 실수요자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병행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현실화 되면 집값의 거품이 제거될 것이라곤 필자의 생각이다.

2. 지방혁신도시란 케치프레이즈로 전국의 땅값이 동반상승해 땅가진 사람들은 돈벌고 땅없는 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정부는 국토발전의 다핵화란 명분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었다.

3. 대북정책에 있어 많은 것을 주고도 핵무기란 위기사태를 가져온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엔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추진이란 성과도 있었다. 거기엔 남북간의 신뢰도 어느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4. 국민은 하루하루를 골골하며 밥한끼 챙겨먹기도 버거운데 정부조직을 방만하게 새로 구성하고 운영해 나감으로써 많은 세금을 조직운영 인건비로 새어나가게 만들었다. 물론 작은정부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들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적었고 무수한 공무원 조직들만 만들어 나갔다.

5. 참여정부가 많은 정책법안들을 생산해 냈지만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본회의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당정간 갈등, 여야간 갈등의 산물로서 대통령 자신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6. 대통령은 시종일관 무사안일(가재도 게편)한 자세때문인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개혁같은 시대적으로 갈급했던 사안들엔 소극적이고 국민연금같이 이전정부가 만들어놓은 급조된 개혁만 서둘러 추진하려 했다.

이상입니다.

제목: 정부, 통계의 오해를 푼다.

이 내용에 대해선 나 같으면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부가 많이 노력한데 비해서 정말 언론에서 때리는 오해를 받을만한 내용들이라서 수감이 갑니다. 한가지 아울러 당부드릴건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개인파산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경제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집행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엔 빚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건전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제결혼 증가추세 댓글...

그게 말이죠.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죠. 우리 사회의 일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들의 영역이 있는한 앞으로의 국제결혼 추세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혼인 당사자들이야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인 것이죠.

제목: 한국사람 애국심 없다.

남자는 사회적 동물이다란 말에는 동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다는 말은 동감 못합니다.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으로 물을 흐려놓는 상태이지만 IMF때 금모으기 운동이나 월드컵 응원전을 보면 상당수 애국애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응원가가 나올만큼 정부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저같은 국민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정부가 통합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평화적인 문화공동체로서의 세계화는 전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그점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비리로 썩는 대한민국...

비리가 생겨도 사법부의 공무원들은 일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비전이 안보이고 그렇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거죠. 철저하게 조사를 하려면 일거리가 느니까 대충 조사하고 좋게잘게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다보니 그런일이 생기는거죠. 정말 큰 문제입니다. 뉴스는 그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자세는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지금 종양처럼 번져 있습니다.

제목: 영어열풍에 대한 댓글...

영어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만 배워서 잘 활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문제는 너도나도 학부모들이 어린나이의 학생들을 편협한 영어공부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학습외적 경험과 풍부한 놀이를 통한 공동체 문화를 익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육은 시험과 영어, 경쟁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어공부(의사소통 능력)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어배워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우리자식들을 외국인 만들려고 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공교육에서 독해를 할 정도가 되면 충분한 것이지 이렇게 사교육 경쟁을 벌여가며 높은 과외비용을 지출한다면 나라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임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영어를 포함한 공부 한분야에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잣대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부로 재단하지요. 교육은 시험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평가해선 안되고 평가되어서도 안됩니다.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시켜주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게 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한 분야에서 피터지게 경쟁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자기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몽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성과 도덕을 가르치는 과목만 있지 그걸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교과외적 활동을 전혀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을 가보십시오. 한창 꿈을 설계해야할 학생들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대입수능과 논술준비를 위해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봄바람은 땀뻘부는데 오늘도 해괴한 문제지를 들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을 풀기위해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교육과정도 문제고 정말 우리 교육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맨날 토론식, 발표, 시청각교육(컴퓨터포함)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 그렇게 교육하는 선생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언어는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입니다. 아직까지는 영어가 국제언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문화의 파워가 정상에 오르면 미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한국에 올 것입니다. 왜 언제까지나 우리 학생들이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돈과 노력을 허비해야 합니까? 이젠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어를 고집하고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못할때 미국은 그시간에 계속 언어문화중주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만의 미국식 열린(?)교육에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차입니다.

제목: 친북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친북을 논하는 것을 이적행위라든가 간첩인양 매도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도 폐쇄된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중국 및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과는 한민족이면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이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과거의 역사에 얽매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목: 군사정부와 민주정부의 차이 댓글...

독재군사정권과 민주정권은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민주정권이 시대의 대세인 거지요. 또하나 정보통신과 첨단시설의 발달로 이젠 더욱 민주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수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하는 시대, 국민의 의견이 곧 국정에 반영되는 시대 이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민주정치 아니던가요?

제목: 교육정책 현안 보고서 댓글...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되 학교교육과정을 새시대에 맞게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가보면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미국식으로 좀 더 학생들 스트레스 풀어주고 방목하듯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실지 몰라도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면 얼마든지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목: 일잘하는 정부란...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 다.

제목: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요인 댓글...

제 생각엔 요사이 우리 사회가 부유해져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히피족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한 직업교육 환경으로 감싸안으면 직무능력의 고도향상으로 개인적인 창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오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자 과정같이 수강생들이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코스들을 많이 개설하여 수강률을 대폭 늘리면 끝까지 수료하는 학생들도 그만큼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에 맞춰 예산도 대폭 확충하구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비영리 봉사단체를 운영할 수도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꼭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정원...

제가 통계청에서 알아보니 2005년 입법부, 사법부 및 중앙부처, 지방직 공무원 총인원 합계가 93만 1천여명이랍니다. 참여정부들어 꾸준히 증가한 수치라네요. 1인당 연봉을 5000만원이라고 평균 잡았을 때 조식을 슬림화해 절약한 인건비로 정승같이 쓰면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_ _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 공무원 1명에 국민 48명 수준인데 우리동네 아파트 관리직원(경비원포함)수와 비교하면 2.6배 많은 수준이네요. 관리직원들 보수에 비하면 연봉이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여담이었습시다. ^^;

국정브리핑에 가보면 1000명당 1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질랜드의 1인당 49.2명이나 그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으로 보았을때 제가 계산한게 더 정확합니다.

제목: 대북정책에 대한 댓글

앞으로의 대북지원 형태는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쌍방의 호혜원칙에 의한 상호협력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원조를 계속하여왔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이적집단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보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핵문제나 대북문제에 있어 전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제목: 국정브리핑, 과장 심하다.

얼마전 제가 이곳 게시판에다 국정브리핑에서 보도된 "아파트 관리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시다만 잘 추진되고 있나 해서 건교부 입법예고란의 해당 주택법시행령의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들여다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 내용을 이번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국정홍보지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국정브리핑에선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입주민이 아이디로 접근해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선공무원은 "아직 여건이 안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일축하더군요.

아래는 해당 첨부파일과 국정브리핑 기사, 그리고 추가 댓글입니다.

주택법시행령(입법예고)
국정브리핑 당시기사

제가 건교부 입법예고란에 가서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보니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가 아니라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대한 공개 의무화 조항이더군요. 큰 예외조항이 삽입돼 있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기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국정브리핑 기사의 내용중 상당부분은 과장된 내용의 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실망이네요. 역시 국정브리핑은 국가정책에 대한 과장된 홍보매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_ _

제목: 대통령의 권한과 FTA

우선 대통령의 권한부터 말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그 행사 권한이 아직까지 막강합니다. 허나 예전과 다른 점은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여론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입법하는 법률안이나 시행령도 대통령이 재가하고 각종 임명권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만 요새는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의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생긴 거지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의 한계점도 분명 있습니다. 나쁘다는게 아니라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주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하나 앞론 좀더 대중의 의견이 여러가지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말해 공무원집행에 있어 아직까지도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인 공무원들의 획일성과 전횡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FTA에 대해서 애국애족님은 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준비만 잘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협상하면 한미간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과 같이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큰 분야는 그 파급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언제까지 우리 농업을 외국과 율타리를 치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단지 개방을 했을때 對內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점이 국민들로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업계에서 외국계 기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FTA도 여러 다른 분야가 개방된다고 해서 모든것이 절단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한미동맹에 대하여...

제가 보기엔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만 보았지 실상을 잘 모르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과거 보다 핵사태가 심화된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재조정 정책과 남북간 교류 등 국제정세가 분명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목: 세상 일에 관심 갖고 살기

전 애국애족님이 쓰신 글은 보지 못했지만 kang님의 생각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제 역할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결정나게 된다는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망이란 나라의 흥망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주변일의 흥망까지 포함됩니다. 그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일에 등지고 무관심할수록 정치는 썩고 세상은 점점 통제불능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아파트 같은 데만 보더라도 주민의 무관심이 더할수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주민을 우습게 알고 더 아파트살림을 멋대로 처리해 버리게 됩니다. 그게 결국 관리비 인상과 아파트 부실관리로 우리에게로 닥쳐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일에 관심을 갖고 살면 안됩니다. 그들은 항상 상대의 허점을 노리고 거길 비집고 들어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기와 같은 존재지요. 정치인들이나 일부공무원들도 비슷한 존재들이 많구요. kang님은 마음 편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잡히지 않는 모기와 같은 존재들과 숨은 곳에서 싸워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신도 참여하지는 못 할망정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kang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엉망이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습니다. 그걸 아셔야지요. 단지 주변의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져 버리게 된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온갖 생활비용이 치솟게 되는 부작용이 얼마든지 닥쳐올수 있습니다. 지금 만큼의 세상이 있기 까지도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럼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못할 겁니다.

제목: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중에 상당수가 사용하다보면 오른쪽 버튼이 맛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드웨어 상의 문제인것 같지는 않고 윈도우즈에서 자주 오른쪽 버튼을 맛가게 만들고 있는것 같더군요. 제 생각엔 마우스를 새로 사라고 하는 MS의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주 깜빡거리면서 제대로 클릭이 안돼요. 여기서도 보니 그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아무리 마우스가 얼마안나가는 물건이지만 아껴쓰고 나누어 써야할 마당에 이런 바이러스 아닌 윈도우즈의 이상현상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젠 우리들도 매번 마우스를 새로 사야할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안업체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제목: 말정치

노대통령님의 그 말정치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시달로 구현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노 대통령이 너무 공무원들 눈치를 많이 보시고 있는것 같아서 물론 그 의도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제목: [덧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통령 연설

추락한 F-15K전투기 가격을 생각했을때 다음부터는 구매과정이나 훈련과정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런것에 소홀히 한다면 국방력의 부실은 물론 군 내부 구매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구매선도 안정성으로 바뀌가고 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숙지를 하게 하여 전투대비태세를 고취해 나간다면 어느누구도 두렵지 않은 군사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목: 갈급한 복지 패러다임

다리를 다친 새가 타락해서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은 새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빨아서 비상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요? 애처롭게 날개질을 퍼덕이는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친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해준 다음 비상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인가요? 복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을 그대로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완치할수 없는 장애라 하더라도 "청춘만화"에 나오는 영화 같이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광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광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장애는 꼭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장애가 아닙니다. 요즘같은 세상엔 근로의욕을 상실한 모은 국민들을 다 장애자로 볼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일터(혹은 창업)에서 조금이나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도와주는 개인화된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엔 이런 전략들이 마련되어 차기정부에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우리나라의 청장년 실업자들(경제활동이 가능한 백수/백조들)의 수효를 생각해 봤을때 정말 이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크나큰 방기행위입니다. 이걸 단지 미래 권력이동의 논의에 있어 누가 주체가 되느냐의 논쟁보다 앞선 절대절명의 국운이 걸린 시급한 현안입니다.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목: 방송통신위 추진안 국무회의통과...

다시한번 말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여 그 위원장과 위원(5명)으로 방송과 통신업계를 주물러 보

올릴 문서3.txt

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차기정부에 임명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다. 법이야 때에 따라 개정하면 그만이고 중요한건 국민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인데 지금의 방송도 어용이란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통신업계까지 제어하려 든다면 여론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겠다는 속내 아니겠는가? 국회 통과가 남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기분이 드는게, 이런 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는게 무지하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국회마저 한통속이 되면 이런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속보이는 짓이 되고 말 것이다. 어쨌든 누군가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문제는 나중에 이 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 쪽에 정부가 간섭하게 되면 인터넷 미디어나 네티즌들의 여론형성과정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것 무시 못합니다. _ _ _

제목: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애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윤선미님 말대로 추진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건 당장 고쳐야죠.

제목: 고용장려금 회사측에 지원

한마디로 직업훈련 마치고 고용장려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왜 월급을 회사에게 주는지 저도 잘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사쪽으로 지원금을 주면 지원자를 착취하기도 쉽고 월급인 상호과도 적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노동부는 꼭 이런 방법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목: 하나로통신 고객의 소리 은폐, 말도 안된다.

하나로통신(www.hanaro.com) 홈페이지엘 가보면 고객의 소리가 "고객센터" 섹션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 "고객의 소리"가 하나로통신 고객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들만이 볼수가 있고 더욱 웃긴건 자신이 쓴 글밖에 보지 못한다는 폐쇄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사이 하나로 광랜이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가 느려져서 고객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자주 했는데 공유기만 걸고 넘어지면서 공유기 버리고 다이렉트로 연결해 사용하라는 식의 상담을 받아서 매우 불쾌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인터넷을 쓰고 있는지궁금하기도 해서 몇 주 전부터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오픈시켜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말. 개인정보 운운하고 음해성 글 때문에 쉽사리 오픈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말, 일반적으로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겠다는 의식이 높고 공공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비공개 글쓰기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덧붙여 하나로 "고객의 소리" 게시판 폐쇄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들의 망관리 책임을 감추기 위해 고객들의 의견교환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것 아닌가? 했더니 "그건 아닙니다. 참고는 하겠으나 게시판을 오픈하겠다는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직원과 잘 얘기해 보십시오" 하더라.

그놈의 고객센터 암수(?)들은 그딴하면 공유기 물고 늘어지고 한번도 나한테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 어제도 공유기 회사에 가서 A/S 받고 내가 다 문제 해결했지 개네들은 시간벌기같은 꿈수만 쓸줄 알지도무지 자기네들 잘못된 고객들한테 알리려 하지 않는다.

오늘도 인터넷이 주소창에 주소를 쳐 넣으면 DNS가 늦게 반응하면서 로딩속도가 느려지는 애로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이 빨라지는게 아마도 DNS 문제인듯 보였는데 이렇게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은폐해 놓아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도무지 참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 이게 무슨 고객센터 게시판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면서 감수해야만 하는 인터넷 생활, 이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이자 불공정 상행위다. 이는 빠른 시일내에 필수적으로 시정돼야 할 큰 쟁점이라고 본다.

제목: 공공근로에 대하여...

저도 공공근로를 했지만 지금은 그리 하고싶은 마음이 나지를 않는군요. 직업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일당이 예전과 변함이 없고 요새 한달에 50~60만원 받는 일자리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착취가 되어버린 인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공공근로도 이전 좀 변화가 있어야할 듯 보입니다.

제목: 출산 장려책

보육비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 듣네. 결혼 안하는 노처녀 노총각들이 널려 있는데 무슨 보육비 지원? 자녀 1인당 한 100만원 나온다면 나도 결혼한

다. 직업능력이 없는데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참 웃기는 기사다.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 가능하세요? 현실성 있게 대책을 논하셔야지... 안된다고 꿈수를 쓰면 누가 좋아하나요? 그럼 전업주부들은 애엄마도 아닌가요? 참 총각이 들어도 어이가 없네요.

제목: 오늘 쏟아진 정부 정책...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진 정부 정책들입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영 믿음이...국정브리핑이 워낙 과장이 심해서요.
그래서 전 내용은 안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지켜지나 우리 나중에 봅시다.

주인소환제 · 국민감시제로 국민참여 강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2011년 기상재해 예측 두배 이상 빨라진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평균임금 90%로 인상

병영내 구타 · 언어폭력 법으로 막는다

월 369만원 이하 가구에 보육료 최대 36만...

학원 그만뒀도 남은 시간 따져 수강료 환불

오염물질 배출량 자동측정 의무화

장애인 LPG지원 개선해 장애수당 더 지급

농가 자녀양육비 지원금 평균 37% 인상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월 27만원 지원

보상금 대폭 인상 국가유공자 생활향상에 기여

제목: 방송언론이 떠드는 법률적 규제의 한계...

전자관보 2006년 12월 18일자

위 내용 중간에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주의깊게 보시면, 정부가 온갖 명분을 내세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현실적인 국민적 편의로 돌아온다면 두 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해를 끼치고 유착관계를 만들어 낸다면 정말 문제가 많지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정말 국민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길...

전자관보 홈페이지 주소는 <http://gwanbo.korea.go.kr/> 입니다.

제목: 오늘 공포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건설회사가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가 안될시엔 건설사가 토지의 매입을 법원에 의뢰(공탁)하게 되어 있다. 허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훨씬이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건설회사가 법원에 매수청구권(아까 말한 지주로부터의 토지 매입을 법원에 의뢰함)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그 지주의 토지 보유기간을 개발계획발표 3년이전에서 10년이전으로 변경하고 상속받은 땅일때는 물려준 사람의 소유기간도 합산해 산정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다. 즉 상속과 피상속 기간을 포함해 개발계획발표가 있기 10년전 이후부터 땅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가 법원에 의해 강제수용될 상황에 놓일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르면 개발호재를 노린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3년이전부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으며 10년 이전이란 과도한 매수청구권 제외설정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란 생각이 앞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말하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이 어렵게 기술된 법률 조문이 어떻게 국민들의 재산권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의 해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필자도 건설교

통부 담당공무원과의 짧은 통화로 얻은 지식이지만 터무니없이 어려운 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조문이 어떻게 국민들과 직접 연관이 돼있는 실생활과 호흡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인지 해당 부처와 법제처는 심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아래 내용은 2007년 1월 11일자 전자관보에 실려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중략-

다.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법 제18조의2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 (현행은 "3년 이전"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인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함.

-중략-

제목: 천리안 탈퇴

잘못했을때 충고해주는 포탈이 진정 님을 위하는 사이트요. 나도 Daum 이용해 보았지만 이젠 회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포탈이 되었죠. 요샌 사용자가 줄어서 잘해준다고는 하지만 블로그 같은거 보면 예전보다 많이 나빠졌어요. 나도 블로그나 바둑 안하지만 천리안도 잘못하는거 무척 많습니다. 특히 뉴스섹션, 보면 이용자들을 위한 참신한 기사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저 쓰레기 언론들이 배출하는 기사를 실어나르기에 바쁘지요. 어떤 기사보면 울화통이 터지고 그러니 포탈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얘기를 풀어놓으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_ _

제목: 식품 첨가물 알레르기에 영향준다.

오늘 MBC뉴스에서는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이 알레르기와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지만 내가 평소 경험한 바론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몇자 적어본다.

나는 특히 눈이나 코가 예민한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접하게 되면 눈이 가렵다든지 비염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했으며 이는 어린이보다 어른이 되었을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이유는 가공식품에 첨가돼 있는 글루타민산나트륨이나 정제염, 나트륨 등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채소나 과일같은 식이성성유 음식을 먹으므로써 몸밖으로 배출될수 있으며 안전한 식사습관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다.

여러분들도 이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계실것이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은 주위의 정보들과 경험을 취합해 보았을때 상당히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식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하면 우리가 평소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위에서 흡수되고 6미터가 넘는 소장 대장을 거쳐 모세혈관으로 그 영양분이 흡수되면서 독소가 간이나 콩팥을 거쳐 오줌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것 자체가 음식을 분해하여 그 성분을 먹는 것과 진배없으므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성분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면서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결론은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요새 같이 채소에도 농약이 검출되는 시대엔 더더욱 먹거리 감독에 당국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먹느냐 또 그것은 안전한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다.

제목: 청와대 신문고 개선요구사항

아래는 내가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쪽의 "민원신청"과 답변하는 구조가 전부 비공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담당자 하는말, 다른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금방 될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왜 자꾸 정부는 국민의 의견소통공간을 막으려고만 할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민원을 참고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것만 같은데 뭐가 구려서 자꾸 민원창구를 은폐하여 칸막이를 만들어 놓는 것일까? 전에는 하나로 고객센터가 그러더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대중을 통제한다는 바로 그 얘기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문고의 나의 민원이 "공개민원"으로 비공개민원이 "민원코드입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나의 민원 같은 경우는 공개민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민원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비공개민원은 "나의민원"과 성격이 같은 것이므로 이런 구조는 다른 사람의 민원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참고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이 신문고의 민원을 쉽사리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이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적극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만 6개월이 넘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어 이렇게 다시 민원을 제기합니다. 즉 요지는 현재의 비공개민원을 "나의 민원"으로 바꾸고 "나의 민원"을 공개민원 방식으로 바꾸어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지금의 공개민원은 공개민원도 아니고 나만이 내 민원을 보는 비공개민원이기 때문에 이같은 민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치는 것이 주무관청이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민원제도를 방치한다면 국민의 계속적인 불만이 쌓여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텍스트상자 안 프롬프트 입력이 느리게 반응하여 매우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장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두 내용이 시정이 안되면 조만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 당위성을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신>

그리고 첨부파일의 이미지가 공개민원 작성시 뜨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롬프트 반응이 느린 것은 민원제기 후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목: 언론의 메니페스토 운동, 지지한다...

요사이 방송언론에서 "메니페스토"란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나도 처음엔 이 말을 몰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공약선거"라고 요약할 수가 있었다. 즉 정책의 정강(정치의 대강)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표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선거가 지역으로 갈려 단순한 표몰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걸음으로써 유권자와 약속을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정책도 단순히 한두가지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하나하나 세부 로드맵을 설계해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과연 후보자가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인가를 어느정도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선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선거풍토임에 분명한건 사실이다. 이것이 비록 선진국에서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배울건 배우고 우리에게 맞게 고쳐 사용하면 된다. 방송언론이 가끔 좋은 보도를 하긴 하지만 이번 보도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 또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략적인 인물의 등용으로 신정치세력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나를 위한 정당, 나를 위한 후보를 뽑으려면 기성 정당, 기성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토론을 통한 후보의 자질도 중요한 거고 말이다.

제목: 혜화동에 갔다 청계천을 둘러보니...

혜화동 서울대 병원 외래 진료차 갔다가 어머니가 청계천에 둘러보자고 해서 근처의 종로5가 옆 청계천에 들렀다. 나도 처음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서 내심 기대하고 갔는데 직접 본 느낌은 복개도로 떼어낸 것 하고 옆면에 돌담쌓고 군데군데 다리 놓은것 빼곤 눈에 들어오는게 별로 없었다.

(화장실도 옆 시장으로 가야했고 식당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다)

역시 방송언론은 정치논리에 의해 이미지를 과대포장하는데 선수다라는 생각을 여지없이 굳히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청계천을 내가 두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다면 주위의 못가본 사람들이 청계천 좋다고 떠드는 것들을 그대로 믿을 뻔했다.

한가지 어두울때 가면 좋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돌담 벽에 군데군데 조명등을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다. 물론 도로로 덮여진 개천을 뜯어서 정비한 것은 잘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하천을 복개해서 평지로 사용하던 장소를 거금을 들여 다시 뜯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비다. 그곳에 장사하던 많은 상인들 보상금은 얼마였겠으며 극심한 교통난은 또 어땠을까?

난 예전부터 반대했었지만 이런 결과물이 언론의 포장을 거쳐 세금낭비를 정당화하는데 급급하다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실제 와보고 실망했을때 가지는 배신감은 결국 되돌아 쫓히는 화살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거대공사를 벌이기에만 바쁜 서울시나 정부가 그 명분이 사회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공사진행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잇권과 유착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릴 문서3.txt

아무튼 오늘 어머니가 졸라서 청계천을 구경하긴 했지만 거금을 들여 복개도로를 정비한 이상 이제 먼 미래에 가서 또다시 하천을 복개(덮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뜯었다 덮었다 이게 무슨 짓인지... 한마디로 시민들 불편은 뒷전이고 멸절된 보도블럭 갈아 덮는거랑 뭐가 다른단 말인가?

제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답변

공개 민원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민원사례라고 취합공개 부분만 있어서 매우 불만입니다. 그리고 나의 민원과 비공개 민원은 그야말로 내 민원만 나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개민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민원검색을 어렵게 하고 공무원들의 민원처리를 불성실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답변주신 내용도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없고 볼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 고충을 처리해 주는 신문고라고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제목: UCC? 언론의 교활함... 댓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을 억지로 대체시키려 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칼럼이나 블로그, UCC란 말은 그대로 사용하면 유독 네티즌만 우리말로 바꿔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화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네티즌들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더욱 화나게 하는건 그들의 정략적 의도가 꽤썸하다는 겁니다. "네티즌"이란 이름의 개인미디어를 "꾼"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기존 언론(방송/신문/인터넷미디어)과 정부미디어(KTV/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같은), 그리고 네티즌들로 대변되는 개인미디어 이렇게 3대축의 역학관계로 풀이해야 합니다. 즉 기존 언론과 정부미디어가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 얘기죠.

정정합니다. 줄바꿈 문자는 이곳 댓글게시판에서
태그 생성시 <t>태그 안에서 자연줄바꿈이 일어난뒤
태그로 한번 더 줄바꿈이 일어나는 버그인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보안해커 개입은 아닌것 같아 정정합니다.

<고객센터 문의>

제가 나도한마디를 이용하면서 그곳에 댓글을 자주 달아왔습니다만 가끔 댓글을 족달면 줄바꿈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면서 문장이 잘리는 현상이 있어 이게 누군가 제 컴에 침입해 줄바꿈 문자를 삽입하는줄 알았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오늘 소스를 분석해보니 <t>태그 안에서 문장이 자연적으로 줄바꿈이 일어나는데 생성되는
태그가 한번더 줄바꿈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버그가 어떤 것인줄 충분히 이해하셨을줄 알며 빠른 시일내에 버그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t>태그 안에서
태그를 삽입하셨는지 정말 이상하네요. 리턴값만 검출해
태그로 변환해 문장을 뿌려주면 이런 현상이 사라지리라 여겨집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우리사회 신뢰, 왜 상실되었는가?

우리 사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의식 없이 복지부동(대충 문제없이 일처리만 해서 녹봉만 받으면 된다는 식)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일처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공무원들부터 공무원조직의 방만함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일반기업의 CEO들이 정직을 숭상수범한다면 신뢰는 거기서부터 싹틀수 있다. 근데 문제는 조직(단체)의 논리와 전략에 밀려 이런 것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제목: 이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현주소다.

청와대 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네티즌 의견이 한번에 보였는데 제가 다시와 오늘 확인해 보니 의견을 Default로 감춰놓았네요.(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국정브리핑도 실명의견을 보여주었다가 어느날 가보면 의견을 감춰놓은 등 참여정부의 댓글 통제는 정말로 가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섹션은 국민들이 댓글을 아무리 열심히 달아도 섹션을 옮겨타면서 댓글란을 뻘뻘스럽게 없애버리는 횡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참여정부의 댓글참여정책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 인터넷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의 댓글란도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놔두는 거지 사용자가 실명으로 글을 써도 댓글을 통제하기에 바쁜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은 그야말로 정말 뻥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란 공론의 장에서 근거없는 비방을 막기위해서라도 댓글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네들은 수천자의 글로 기사를 게재해 강제로 읽게 만들어 놓고선 이용자들에게는 200자를 넘는 의견개진공간도 주지 않는 미디어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파렴치한 주장은 일말의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이란 쌍방향 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발상은 정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인 생각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집단이기주의라는 함은 우리나라 언론집단 혹은 국가 미디어 집단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개인미디어를 말살하려는

의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제목: 민원인들 뽕뽕이 돌리는 정부기관...

오늘은 평소 내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겪었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즉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기관이 한 네다섯개쯤 뜨고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만족스런 답변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뽕뽕이를 돌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이곳 천리안 메인페이지와 뉴스서비스의 팝업광고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 불법팝업광고 신고가 토요일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 갔는데 당직서는 경찰관이 "사이버경찰청"으로 신고를 유도하여 그 쪽으로 신고했지만 관련법규를 들어대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가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거기로 갔더니 우리는 소관이 아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가보라고 한다. 또 거기서 만족스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증거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정보통신부"로 가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센터"로 전화를 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간 곳이 "인터넷119"라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였다. 그래서 거기에는 근거법령과 함께 최종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니웁걸 거기선 결정을 할 수 없으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 고난의 민원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악성팝업광고는 점차 개선되어 갔지만 난 맥이 빠져서 중간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보류했다. 그런데 오늘 과거 메일을 들추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어이없는 민원처리를 받고 계속 가만있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쪽(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아니웁걸 대표번호라는 1336번이 주민번호와 핸드폰번호, 스팸이 오는 핸드폰 번호등 쓸데없는 전화번호와 정보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신고해보고 이해하는게 가장 빠르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번호를 우회해서 교환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당시 신고했던 날짜가 2006년도 6월 중순경이었는데 뽕뽕이 돌다 지쳐서 통화를 못하고 이제야 했다"는 말과 함께 "이런 불법팝업광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스팸광고의 신고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 특히 민원을 처리해주는 정부기관이란 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법팝업광고를 신고하는데 관련된 기관이 경찰서를 포함해 무려 8군데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더 찾아보면 서너군데는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복되는 기능과 부서도 많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한군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바로 세금이 센다는 얘기고 불합리하며 부당한 민원처리과정이란 얘기다.

새해엔 과감히 정부조직 및 산하기관을 정리, 한곳으로 일원화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또다시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랄뿐이다.

<덧글>

요새 또 천리안이 팝업광고 계속 띄우대요? 여러분들도 광고 보기 싫으시면 IE5.5 SP2 이상 설치하시고 네이버 툴바 설치해서 팝업차단 사용하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정부에서도 업계 두둔하고 법령 개정할 생각을 안합니다. 그 스팸대응센터란데 있는 사람이 겨우 하는말이 보안 설정 최고로 올려서 사용하라는데 클릭도 제대로 안되는 보안설정으로 뭘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엇먹어라 하고 끊어버렸죠. 그 사람 이 민원 종결처리했어요. 처벌을 못하겠대요 현행 법률로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는 모르채, 천리안이나 법률 다루는 정통부나 실제 업무 맡고 있는 스팸대응센터나 그 밖에 그 나물이다라고요.

정말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제목: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국회의원들

아래는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찬성의원 명단이다. 이때 통과된 결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루기 위해 국회에서 소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의결안이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정말 국민의 대표자들 맞나?

이렇게 국민들이 방송과 통신의 심의기구통합을 반대하는데 왜자꾸 그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는지 정말 입맛떨어지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어떤 간섭을 해서 국민들 의사소통을 틀어막을까 거기에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같은 표몰이(투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를 할지... 이제는 슬슬 행동개시에 들어가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제목: 천리안 [공지] 글쓰기 안내를 읽어보고...

"[공지]천리안 글쓰기 안내"에 덧글이 엉뚱한 데로 달아져 여기에도 씁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듯...)

이곳 게시판을 이용하다 느낀점을 말씀드리는데요 가끔 광고게시물이 올라와도 왜 천리안에서 삭제하

올릴 문서3.txt

지 않는지 모르겠더군요. 더군다나 "오늘의 한마디" 같은데는 천리안 광고게시물이 올라오던데 많은 선량한 글쓴이들을 위해서라도 게시판 관리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글쓰기 안내를 읽어보고 방침과 다른것 같아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제목: 사법부에 대한 비판

"재판에서 지고도 팔자거니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 더더욱 열심히 재판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그렇게 말한 판사가 있다면 우리 사법부의 진정(眞正)성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저도 주변 경찰서에 진정(陳情)을 넣은 적이 있는데 검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려서 물 먹은 적이 있어서 심분 이해가 갑니다. 그대놓고 팔자라고 생각하라니 참 웃기지도 않은 소리죠. 사법에 있어 판결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선 절대 선(善)에 입각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제목: 노무현 대통령, 23일 연설을 듣고...

청와대 신년연설 연설문 및 동영상

말에 myeong2073님 너무 노대통령님의 권한을 우습게 보시는것 아닌가요? 나머지 기간동안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싸인만 팍팍 하라니요, 그럼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충 일처리해 나라 맡아먹을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권한이양이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1인 리더십이 얼마든지 강력하고 충실한 국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처장관, 말단 공무원까지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고 지휘전달체계가 확고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무튼 오늘 연설은 참여정부 4년의 반성과 평가가 담겨져 있지만 대통령의 남은 기간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노대통령님은 새로운 IT시대에 있어 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깊이있게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한가지더, 참여정부는 이런 댓글참여정책도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정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댓글정책을 펴 주었으면 합니다. 이곳의 댓글 시스템도 좀 이상하네요.(전체의견을 보고난뒤 댓글을 달면 댓글이 안달아 집니다.)

제목: KBS UCC 누X꾼 보도...

오늘 KBS9시뉴스에서 이상한 변태 동영상을 보여주며 또 UCC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지극히 자극적인 흥미거리를 다룬 오늘 소재는 KBS 알림꾼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네티즌"을 "누X꾼"으로 평가절하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못보신 분은 KBS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시라. 그 내용에 분명 웃음이 나오겠지만 바로 뒤에 흘러나오는 "누X꾼" 소리에 한방 맞으면서 넘어오는 억울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난 MBC, SBS에 이어 KBS 보도국 알림꾼들이 지극히 타락하고 교활하다는 걸 여기에서 말해두고자 한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시청자들을 세뇌시켜야 한단 말인가? 정말 세상 말세다.

허꼬부라지는 "UCC" 말뒤에 "누X꾼" 속지말고 우리모두 정착어인 "네티즌"에 한표 줍시다.

제목: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제가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통합추진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존 방송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방송미디어를 견제한 것이었다면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측이 기존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여론 및 미디어를 관리하기 어렵게 되자 그걸 하나로 통합해 5명의 위원으로 손쉽게 방송과 통신업계를 견제하자는 취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방송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영역까지 간섭하는 그야말로 미디어업계의 대부로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위원 5명의 권한이 실로 막강하므로 정부가 바라는 어느정도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통합하기 위한 명분은 효율화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정부가 미디어의 통제를 손쉽게 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통합효과는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되어 소수의 위원이 중요한 방송통신인가업무와 규제를 다룸으로써 업무범위를 확장한 효과뿐이란게 저의 생각이고 중요한건 미디어의 독립성, 특히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있어 국민들의 의사소통 활로를 어떻게 열어주는가에 의원여러분들의 논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법률안이 제정되길 기대하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목: 시민의 발 볼모로 요금 올리는 서울시...

관련기사

시민의 발을 볼모로 요금 인상하는 서울시장 및 관계직원들은 사족을 멀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시꺼먼 매연 마시면서 인도로 걷고 있는데 요금인상이라, 그것도 사전에 시민들 이해도 구하지 않고 지네 멋대로 정해서 의회 상정하고 정말 이려고도 너네들이 시민의 공복 맞나? _ _

지금까지 계속 요금 올리면서 걸어다니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언제 공기 맑게 하는데 신경이나 써봤나? 참으로 어이가 없다. 서울시의 "맑은서울추진본부"는 뭐하는 부서인지... 서울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걷기운동 펼치기 이전에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없게 개선하고 요금 올리기 이전에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나 그것부터 살펴라.

물론 천연가스버스가 극히 일부 도입되긴 했지만 공기질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관악산엘 등산하면 서울의 스모그 악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데 아마도 공사용 덤프트럭이나 경유버스및 영업용차량들이 대거 매연을 내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제목: EBS토론카페 진행자 누X꾼 사용...

EBS 채널을 돌리다 "토론카페" 가 악성댓글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X꾼" 하길래 난 어이가 없고 놀래서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다. 어떻게 악성댓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진행자(이런 사람은 뒤에 꾀를 붙여 진행꾼이라 불러줘야 한다)가 많은 네티즌(국민or시청자)들을 앞세우고 "누X꾼" 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방송이라는 EBS까지도 네티즌말살어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제 믿을 수 있는 미디어는 무엇이란 말인가? (언론/정부/개인미디어 중 어디에 의지해야할 것인지.. 문제는 최후의 보루인 개인미디어들 중에도 기존미디어의 프락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또한 주의해야 한다)
아래는 토론카페 게시판에 올린 나의 시정요구문이다.

오늘 진행자가 "네티즌" 대신 사용했던 "누X꾼" 용어 듣기에 거북합니다. 사용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들이 진행자님보고 "진행꾼" 이라고 부르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도 EBS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니 악성댓글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토론이나 언론에서 비치는 누X꾼 사용도 일종의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자꾸 시청자들이 듣기 거북한 누X꾼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 저의가 무척 궁금하군요. 우리 소리대로 살아갑시다. 역수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란 알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누X꾼이 아니라 "네티즌" 이란 사실, 억지로 쓴다고 그게 변하진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늘은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자꾸 그 말 쓰면 방송국에 언제 직접 전화드려는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욕한다고 뭐라하지 마십시오.

언어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BS 토론카페 게시판

<답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netizen은 net(인터넷)과 citizen(시민)의 합성어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칼럼과 블로거라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순화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네티즌" 이란 용어만 유독 "누X꾼" 이란 저속한 느낌의 용어로 변용되면서 그 의미가 격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netizen이란 어원을 살려 "누리민" 이나 "누리인" 이란 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풀이하자면 "인터넷"을 의미하는 "누리" 와 "국민" 이 합쳐져서 "누리국민" 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누리민" 이 이상하면 그냥 안쓰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칼럼" 이나 "블로그" "UCC" 등과 같은 외래어는 변용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네티즌" 이란 외래어만 굳이 우리말로 그 의미를 격하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즉 "누X꾼" 이란 말은 "네티즌" 이란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독 기성언론의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러니까 더욱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말로 정착돼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놔두고 억지로 "꾼"을 붙여 사용한다면 그게 올바른 언어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 judo0120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님 글을 보다가 '누리꾼'이란 표현을 왜 거북해 하실까 하고 인터넷

> 검색을 해보았더니 '꾼'이라는 우리말에서 풍겨나오는 좋지않은 듯한

> 느낌때문인듯 합니다.

>

> 정치꾼, 도박꾼 등등 꾀 이라는 말이 들어 가면 굉장히 속된듯 한 느낌

올릴 문서3.txt

> 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누리꾼이란 말의 '꾼'
> 또한 속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 그런데 누리꾼이란 표현에 대한 다른 글들을 보던 중에 정치인, 언론인
> 등등의 '인'이 붙은 표현은 그 앞의 다른 글들이 한자어이기에 '꾼' 이
> 란 말보다 같은 한자어인 '인'이 잘 어울리지만 '누리'라는 순 우리말에는 한자어인 '인'이 붙기보
다는 순우리말인 '꾼'이 더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답변에
더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
> 외래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 생각합니다. 누리꾼이라는 말 개인적으로는 다른 '꾼'들과 다르게
> 느낌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님과 같이 저와 다른 의견을
> 가지신 분들이 많다면 또 다른 순우리말을 한 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 요? '네티즌'이라는 용어와 그에 상응하는 순우리말 표현을 만들어서
> 둘 중 더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한가지를 지칭하는 두가지 표현이 혼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서로간의
>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
> 제가 처음부터 님의 생각을 제 맘대로 정리한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 님이 '누리꾼'이라는 말을 불편해 하시는 이유가 제가 말한 그것과
> 같은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 실례했습니다.^^;

<덧글2>

저도 블로그에 많은 글을 써보고 게시판에 글도 많이 올리고 덧글도 많이 달고 해보았지만 중요한건
현재 블로그와 칼럼 시스템들이 그 신뢰성과 정직성 면에서 네티즌들로부터 믿음을 잃고 말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전 이전에 다음과 엠파스에서 칼럼을 썼습니다만 다음칼럼은 구조개편으로 네티즌들의 칼럼노출을 제
어하기 시작했고 엠파스는 오래 글을 쓰다보니 블로그 검색결과에서 사용자의 DB에 장난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까지 직접 방문해서 시정을 요구했었지만 얼마뒤 재차 똑같은 일이 발생해 칼럼
을 폐쇄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블로그에서만 덧글을 달게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신뢰를 상실한 블로그가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물론 일부 소속기관의 블로거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덧글을 단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요사이 같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기사에 대해서 덧글을 달게
하는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되신 유니씨 같은 경우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서의 덧글이 이슈가 되었던것이구요. 그럼...

> neticus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어제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던 민경배 입니다.
> 토론 A/S 하러 왔습니다...^^
> 먼저 제가 제시한 대안을 인상깊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
> 맨 밑에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블로그를 활용한 덧글이 덧글 활성화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 현재 제목을 클릭한 후 본문을 읽는 방식과 비교할 때
> 클릭 횟수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
> 그럼에도 이 방식이 악플 제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 공동의 공간이 게시판이 아니라
> 자신의 공간인 블로그에 덧글을 쓰는 방식이니까
> 아무래도 생각없이 마구 악플을 날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 물론 자기 블로그에도 대책없는 악플을 잔뜩 쌓아두는 사람이
> 전혀 없을거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 그래도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judo0120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

>> 오늘 토론카페는 제가 봐온 방송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많은 토론 중 제가 제대로 집중한 토론이 오늘 것 하나였을 수도 있겠네요.^^;

>>

>> 오늘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민교수님의 악성댓글에 대한 대안제시였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어지껏 토론에서는 게스트 분들이 대부분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대책들 즉, 일반 대중들과 별반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

>> 문제점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의 그 문제의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에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이번 토론은 다른 토론에 비해 좀 더 구체적 대안들을 볼 수 있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

>> 그리고 토론 막바지 쯤에 사회자님이 민교수님께 '댓글을 개인의 블로그로 링크해 놓는다면 댓글의 활성화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참 적절한 질문이었던 듯 싶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말입니다. 저도 민교수님의 그 대안을 듣고 사회자님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거든요.

>>

>> 아! 그리고 교수님께서 댓글을 개인의 블로그로 링크하는것이 댓글의 활성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포털

>> 사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한 후에야 전체 댓글을 볼 수 있는것과 별반

>>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댓글을 각자의 블로그로 링크 시키자는 방안은 악플을 제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

제목: 교육정책(교육평준화) 댓글...

전인교육, 좋은 얘기죠.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시험을 위한 전인교육이지 학생들의 사고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전인교육은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보더라도 독해나 토론, 발표, 회화 또는 공식의 개념과 과정을 보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교육부의 학생부 반영비율 상향조정도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학교교육이 내실화된 내신평가를 위한 사전준비가 되어있질 못합니다. 그저 예나지금이나 대입과 시험, 수능을 위한 딱딱한 교육이 변함없이 횡행되고 있지요.

제목: 하나포스검색 IE5.5에선 안된다

오늘 하나로드림에서 운영하는 하나포스닷컴을 들렀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5.5에선 제대로 검색창이 동작하지 않고 결과도 아무것도 안뜬다는 사실이다. 내가 구형 컴퓨터가 있어서 익스플로러 6.0을 덩치 때문에 깔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버그가 있다는 건 기분나쁜 일이다.

다른 포탈들은 다 5.5 버전 이상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포스만 검색이 안된다니 이건 순전히 5.5 이용자들을 무시하고 이용하지 말라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본다. windows 98이나 2000을 쓰는 구형 컴퓨터에서 6.0을 깔면 시스템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부 이용자들이 5.5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버그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는 일종의 업그레이드 강권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목: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평가

이런 글을 쓰는 정론님이 참으로 뭐라할까 안돼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군사정권 운운하며 국민들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까지 가끔 있는데 지금이 어느시대라고 얼토당토한 주장들을 하시는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볼때마다 어느 시대에 사셨던 분들일까 궁금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박정희 시대에 어린시절을 살았고 전두환 시대에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쥐긴 했지만 지도력을 발휘해 국민들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룬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권말기 인간 박정희도 어쩔수 없는 권력욕에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은 엄연한 역사적 평가이며 "그는 좋은사람이다 나쁜사람이다" 확실히 선을 그어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전두환씨 역시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창출해 군인정치를 펼쳤지만 군최고통수권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진압하는데 있어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후세의 평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론님은 너무 안이한 인식과 함께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영남권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정론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하지만 분명 군사쿠데타는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창출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중요한건 현재 전두환씨가 이룩한 과업이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군인정치가 흔히 그러하듯이 획일적인 교육과 개개인의 창의성이 묵살되면서 지금의 경제난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게 분명 사실이거든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참여정부들어 상황이 많이 악화됐지만 이들은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개혁하는 정권이었고 궁극적으로 원인을 창출한 집단은 획일적인 상명하복식의 군사정권에 그 책임이 많습니다. 지금도 과거 수십년간 누적된 잘못된 교육의 폐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청년실업 및 출산율저하, 고령화, 저성장의 고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현 정권에서조차도 교육문제는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목: 이필상 교수 논문표절...덧글2

아무리 제자들이 논문의 표절을 허용했다고 먼저 발표했다는 치더라도 그건 대학사회의 바람직한 교수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학의 다른 교수들마저 이런 관행들을 나몰라라 한다면 교수와 학생 특히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석박사들과 교수와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설정이 될까요? 즉 가히 대학의 "논문접대문화"라고 불러도 과찬을듯 싶은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문화일까요? 특정교수를 위해 학문의 결과물을 접대한다.. 글썄요 전 아무래도 거부감이 앞서는데요.

그리고 논문의 표절과 접대의 의미 또한 일반적으로 구분됩니다. 표절은 제자가 발표한 논문을 재탕하여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고 접대는 제자가 교수의 논문을 대신 써주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제목: PD수첩 문제있다.

중요한건 기사의 옳고 그름을 독자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기자들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기자들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PD수첩과 같은 시사프로그램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현실은 마음에 안드는 대상을 마녀사냥하는 식의 보도가 판을 치고 있다는게 문제지요.

제목: 복지부 장관 정치인출신 기용

물론 홍우빌딩님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관의 자리에 정치적 인물을 기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 그런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당부처의 전문가들을 자리에 앉히면 일은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안된다 고를 말하더군요. 하지만 대통령이 똑똑하고 잘 안다면 홍우빌딩님 말대로 전문관료 출신기용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 대한민국 콩가루 집안

대통령을 비난한다기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비판하였다고 보는게 옳을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셨으니깐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거대 공무원조직에서 대통령도 그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쉽사리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혹여나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을까 조직 특유의 무사안일한 일처리로 각종결재에 있어 국민들의 뜻과 상반되는 입법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싸인만 해주는건 아닐까 국민들은 그걸 걱정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는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변에선 온통, 집값이 뛰고 경제난을 만들어냈다고 떠들고 있지만 과거 어느 후보가 되도 이것보단 잘하지는 못했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즉 대통령의 비판 이면에는 그의 정치력에 대한 상당수의 암묵적인 지지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게 제 해석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최근 열린우리당의 성급한 탈당사태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하느냐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절대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당인 아니기때문에 다음 대권도 민주대연합세력이 노려볼만하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민주대연합세력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을 비롯해 민주당, 민노당, 열린우리당, 노무현파, 탈당파 등 여러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여당이 훌륭한 후보를 추대하고 앞서말한 대연합세력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보수꼴통의 지역당인 한나라당을 제압할 수 있는거지요. 이상입니다.

제목: 고정리 화장장 설치에 관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민원...

아래는 본인이 건설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정리에 꼭 화장터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주변민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1번국도에서 진입하는 놀왕리 1구 2구, 문암골 막골 언덕골 수산리 일대는 토지와 건물의 자유매매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든지 정부에서 일대 토지를 수용하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홍재동 벽재 화장장을 보십시오. 용미리 가는 길은 모든 토지, 건물이 폐허가 되고 방치되어 정부가 어찌 이리 무관심하여 민생을 죽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최대한의 특혜를 줘도 반대할 판에 민생을 생각치 않고 밀어부치기식 공사를 한다면 여기 주민들은 죽을 각오로 단합해 싸울 것입니다.

주변주민 죽이는 화장장 건설, 결사코 반대한다! 주변생계 살리려면 우회도로 만들어라!

주) 주민들도 화장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전용도로나 기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 우리나라 세금 적게 낸다 댓글...

이보시오. 우리집만 해도 세가족인데 다 놓고 있소. 한달 생활비 수입이 100만원이요, 그것도 편집살림 차린 형님이 대주고 있소. 우리형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뼈빠지게 일해서 우리 식구 벌어들이고 자기 식솔들 다 먹여살리면서 작년에 천만원이란 세금 냈다고 하오. 당신 정말 상황을 잘 모르고 떠드는것 같아 한마디 했소. 주변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천지로 널렸소.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지 마시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소.

제목: UCC 가이드라인...

UCC만 블로그냐...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관리해왔던 수많은 블로그, 칼럼들 다 죽여놓고 이제와서 무슨 가이드라인? 업계나 정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제목: 음식에 포르말린 넣어서야...

내가 알기론 포르말린은 독성물질이라고 알고 있다. 세균의 번식을 막는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인체에 특이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평소 사먹는 음식물 같은데에도 부패를 막기 위해서 미량의 포르말린 희석액을 넣는다고 들었는데 이건 순전 업자들의 유통상 편의만을 생각했지 국민들의 건강은 생각지 않은 처사라고 본다.

제목: 컴퓨터 구입후 2주내에 고장 찾아내야 교환된다?

노트북의 사운드장치가 안잡혀서 소리가 안들리는 문제가 빈발하는 것 때문에 내 나름대로 테스트를 한 후 구입한지 한달만에 도시바 고객센터에 A/S를 맡겼는데 두달이 넘도록 그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는 말에 황당했다. 도시바 고객센터 직원의 말에 의하면 노트북 같은 컴퓨터 완제품도 구입한지 2주 내에 고장을 찾아내야 새제품으로 교환이 된다고 해서 내가 소비자기본법(구소비자보호법)을 찾아보니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었다. 시행령도 두리몽실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을 하자 자기들은 보드를 갈아줬으니 또 같은 증상이 나오면 동영상으로 증거자료를 캡쳐해서 보내달라는 것이다. 난 보드를 갈았다는 것부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고 중요한건 사운드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니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했다.

결국 반복되는 얘기가 "수리를 해도 보증기간 내(3개월이 채 안됨)에서 증상이 반복되니 다른 모델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과 도시바 측에선 교환도 환불도 불가하다고 하며 "문제는 소비자의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책임을 면피한다. 내 주장은 사운드장치가 응용프로그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드라이버 제공도 도시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치가 사라지는 문제를 보증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건 분명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까지는 자기들은 책임질 수 없다"고 발뽕한다. 분명 프로그램 설치후 업데이트도 다 했고 바이러스 검사도 다 마친 상황에서 무엇을 더 검증하라는 건지...

그쪽(도시바)에서는 테스트했을때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쪽에선 빈발하는 사운드 문제를 동영상 캡쳐까지 했는데도 교환이 안된다고 하니 이건 순전히 누가 참이고 거짓이냐는 진실게임이나 다름 없었다.

하기사 요새같이 조직의 논리에 신뢰가 무너진 사회 속에선 점점더 진실을 다루는 문제가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다 드러난 문제를 면피하는 도시바의 소비자 정책에 정말 문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자기들도 모르는 상황(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치가 안잡히는 문제는 하드웨어 문제다)을 "교환하면 해결될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인지... 바꿔 보지도 않고 "교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쥐뿔도 모르면서 못바꿔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A/S정책이다. 이면의 제품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하란다. 이 말에 정말 세상이 싫어지는 순간이었다. 역시 일본 쪽바리들의 소비자 정책은 개떡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제목: [답글]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이 글 쓰신 분은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신것 같아 몇마디 적습니다.

정신병은 첫째 약치료가 제일 먼저입니다. 약을 끊으면 머리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져 도파민의 이상분비로 감정이나 사고가 올바르게 못하게 되고 온갖 잡념이 끼어들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다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성증상(신체적 병인을 가지고 외부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병한 사람)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데, 반면 음성증상(서서히 병이 악화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나 사회적 기능의 결여를 나타내게 됩니다.

양성증상의 경우엔 상태가 나쁠때 일시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수년에 걸쳐 약치료가 한계에 다다랐을때 그러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치료제를 증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보통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에 재발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 약을 증량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성증상의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상당기간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성증상의 환자들은 서서히 나빠지고 또 약치료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한게 일반적이지요.

약물치료 기간 중에 재발을 막기 위해 중요한 건 생활습관입니다. 어느정도는 규칙적이고 나태하지 않은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 세가지만 철저하게 지키면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상당기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뇌에서 분비되는 그 도파민이란 물질이 약물로써 조절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로토닌(기분을 조절하는 물질)과 함께 일반인들처럼 신경전달물질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도파민이란게 흥분전달물질이고 인간의 상상력과 관계되며 또한 성호르몬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영구적인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며 기존의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아까 언급한 생활습관/식생활/운동 이 세가지를 잘 운용해 나가면 노후에 가서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이젠 아래 [정신병자님]이 쓰신 것처럼 병원에서 일어나는 난동이나 약물치료에 대해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모르면 뭐든지 이상하게 보이고 궁금한 것입니다. 아래에 쓰신 글은 잘 모르시는 분이 쓰신것 같아 적어 보았습니다.

p.s

밀엔 생체실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입원해도 약복용후 안정을 취한 다음 필요한 검사 몇가지와 자율활동, 집단치료시간(음악이나 미술, 토론, 레크리에이션 등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 정신병자님의 원글 내용입니다. -----

>아니지 선동할때는 그이유가 아니고 정신병자는 모두 위험한사람이니 약을 먹여야 된다고 적혀 있지
>그런데 과연 약이 그럭 효력이 있을까?
>92년도 참 병원에 들어가서 복용한약으로 환청을 경험 했고
>98년부터 지금까지 장기복용하면 기괴하다못한 황당무계한 정신병을 약을 복용하고 겪었다. 그중에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약을 끊음과 동시에 사라졌지만 난 아직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세월이 무려 9년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린 거창한 빨갱이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걸림돌도 아니었다.
>그런데 건강한 너희들은 온가족을 이간질 시키고 창살속에 우리를 밀어 넣었다.
>양심있으면 반성해봐라 내가 진짜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자가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알것이다. 이 악마 같은 건강한 세끼들아
>약 한알이면 몇천만가지로 미쳐서 날뛰는 세상에 달랑 보호자 같지 않은 보호자 말한마디에 정신병자 라면 치를 떠는 겁에 질린 정신과 의사 한명의 판단에 우린 이굴욕의 세월을 살아간다.
>과거사라 웃기지 마라 현재에도 그 모양과 대상만 바뀌었을뿐 더 무고한 사람이 민주화 뒤에 일어났다.
>당신들은 잊었나 벌써 잊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총에 맞아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늘었는데도 당신들은 재대로 보지 못하는가?
>이정권이 민주화라고 노사모가 어쨌다구 난 우리들일만으로도 미칠지경이다. 그나마 정신을 다잡는중에도 너희들은 끊임없이 가슴에 생체기를 남기고 고문 했다 이충가면을 쓴체...
>우린 빨갱이도 정치적 걸림돌도 아니었다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꿈을 꾸던 이시대의 보통사람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
>정신병원에서 생체실험 안한다고 개가 웃는다.
>개가 웃는거 본적 있는가?
>병동내에서 환자가 폭행을 당하고 방치되도 신고도 경찰은 들어오지도 않고 아예 접수조차 안되는 상

황에

>정신병원에서 생체실험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나? 생체실험 안한다고 개가 웃는다.

<댓글>

이윤찬 2007-03-25 18:55

양성증상인 사람들은 평소에 정상인과 완전 똑같이 생활하며 약이 모자르거나 생활습관이 틀어져 잠을 못자게 되면 악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고의 비약이나 잡념, 가상공간에서의 지시 등 상상력이 정상을 넘어선 이상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고의 황폐화, 극단적 사고로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병이지요. 의사와 환자 자신,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병이기도 합니다. 병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마련이니까요.

이윤찬 2007-03-26 16:31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구해 편의를 봐 주면서 새로 나온 약물을 실용화단계 이전에 임상실험을 하는 건 있습니다.

제목: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하여...

대학에서 수능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교과의 좋은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우수한 인재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정부 쪽에서 내신을 강화하려는 것은 공교육의 내실을 다짐으로써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죠.

그러나 양측이 다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인재는 기존의 우리 학습방법으로 길러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다양한 수업기법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주입식 교육이 남아 있는한 내신을 강화한들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전인교육이 완성되겠습니까?

중요한건 수업지도안은 만들되 좀 더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자율화하고 창의적 기법을 살려주어 수업을 재밌는 과정으로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과 같은 평가요소도 같이 일정비율 반영하면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나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3불정책의 모순은 기존 공교육의 개혁 없이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틀안에 대학들이 들어와 주기만을 바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을 개혁하고 정상화한 다음 일정비율 수능을 반영하는 식으로 비전을 제시한다면 대학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학이나 정부나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정책을 편다는데 있습니다.

학원의 과외를 지지하는 대학들 선발방식이나 공교육 개혁없이 내신만을 주장하는 정부나 칼로 물베기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들 본질을 덮고 피상적인 공론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우빌딩님의 학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구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똑똑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벌은 없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열마든지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봐도 이런 현상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샌 서울대 나와도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중요한건 사회생활에서의 능력이죠. 통계를 봐도 학벌 좋다고 다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학벌이 좋으면 초봉을 남들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상고졸업의 사법고시 출신인 세상에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요샌 대학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있는 대학원을 선호하는 기업들 풍토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게 약간 특별하다면 특별할 뿐입니다.

제목: 주주들의 경영참석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자를 선임하고 중요한걸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간섭하는 일은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같이 몇% 안되는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기형적인 주식회사 형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이같은 행태는 말도 안되는 일이고 몇몇 대주주를 비롯해 소액주주들의 단결력이 강화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소액주주로 좀 더 확대하고 회사에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목: 고교 등급제에 대하여...

올릴 문서3.txt

특목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참여정부도 할말이 없지요. 예전에 교육부 장관 임명때 김병준 전 비서실장이 자녀 외고 편법 입학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요새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등급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걸 보고 그 순수성에 좀 의심이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부모들 자녀들을 특목고 못 보내서 안달이고 학원도 돈벌이에 미쳐서 특목고 반을 서둘러 증설하였습니다.

문제는 교육이란 것이 그런 특목고 대비반 학생들 만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하신 말씀인 지는 모르겠지만 뒤쳐지는 학생이나 국민들도 그에 걸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도 그에 맞게 조정이 돼야 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나오되어 사회에 나왔을때에도 한국경제의 일원으로 당당히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뒷바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정치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혹자는 외람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입으로는 무슨 정치를 못하나? 저도 요새 노무현 대통령의 집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급제 문제는 학교내신을 시험위주의 단순암기에서 발표/토론/논술/시청각/창의적교수법/원리탐구 쪽으로 교육목표를 수정해 특목고의 폐단을 없애고 학교마다 우수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교육원리로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간 격차를 해소한 다음 수능같은 지필식 시험을 논술/구술면접과 함께 일정비율 입시전형에 반영한다면 완성도 높은 입시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교육 개혁을 해나가면서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면 얼마든지 현 교육상황은 변모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허나 정부나 대학이나 도무지 변할려고 하질 않아서 문제이지요. 다들 교육, 교육 외치지만 정작 개혁이란 염불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변한게 있습니까? 오히려 학원 입시교육은 더욱 악화되었지요. 사교육비는 계속 급상승하고 산업발전에 투자되어야 할 소득이 망국적인 사교육에 몰린되고... 정말 이걸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이 글 쓰신 분은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신것 같아 몇마디 적습니다.

정신병은 첫째 약치료가 제일 먼저입니다. 약을 끊으면 머리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져 도파민의 이상분비로 감정이나 사고가 올바르게 못하게 되고 온갖 잡념이 끼어들게 되지요.

그러나보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다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성증상(신체적 병인을 가지고 외부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병한 사람)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데, 반면 음성증상(서서히 병이 악화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나 사회적 기능의 결여를 나타내게 됩니다.

양성증상의 경우엔 상태가 나쁠때 일시적으로 괴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수년에 걸쳐 약치료가 한계에 다다랐을때 그러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치료제를 증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보통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에 재발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 약을 증량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성증상의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상당기간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성증상의 환자들은 서서히 나빠지고 또 약치료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한게 일반적이지요.

약물치료 기간 중에 재발을 막기 위해 중요한 건 생활습관입니다. 어느정도는 규칙적이고 나태하지 않은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 세가지만 철저하게 지키면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상당기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뇌에서 분비되는 그 도파민이란 물질이 약물로써 조절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로토닌(기분을 조절하는 물질)과 함께 일반인들처럼 신경전달물질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도파민이랑 흥분전달물질이고 인간의 상상력과 관계되며 또한 성호르몬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영구적인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며 기존의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아까 언급한 생활습관/식생활/운동 이 세가지를 잘 운용해 나가면 노후에 가서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이젠 아래 [정신병자님]이 쓰신 것처럼 병원에서 일어나는 난동이나 약물치료에 대해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모르면 뭐든지 이상하게 보이고 궁금한 것입니다. 아래에 쓰신 글은 잘 모르시는 분이 쓰신것 같아 적어 보았습니다.

p.s

밀엔 생체실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입원해도 약복용후 안정을 취한 다음 필요한 검사 몇가지와 자율활동, 집단치료시간(음악이나 미술, 토론, 레크리에이션 등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 정신병자님의 원글 내용입니다. -----

>아니지 선동할때는 그이유가 아니고 정신병자는 모두 위험한사람이니 약을 먹여야 된다고 적혀 있지
>그런데 과연 약이 그럭 효력이 있을까?
>92년도 청 병원에 들어가서 복용한약으로 환청을 경험 했고
>98년부터 지금까지 장기복용하면 기괴하다못한 황당무계한 정신병을 약을 복용하고 겪었다. 그중에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약을 끊음과 동시에 사라졌지만 난 아직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세월이 무려 9년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린 거창한 빨갱이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걸림돌도 아니었다.
>그런데 건강한 너희들은 온가족을 이간질 시키고 창살속에 우리를 밀어 넣었다.
>양심있으면 반성해봐라 내가 진짜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자가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알것이다. 이 약마 같은 건강한 세끼들아
>약 한알이면 몇천만가지로 미쳐서 날뛰는 세상에 달랑 보호자 같지 않은 보호자 말한마디에 정신병자 라면 치를 떠는 겁에 질린 정신과 의사 한명의 판단에 우린 이굴욕의 세월을 살아간다.
>과거사라 웃기지 마라 현재에도 그 모양과 대상만 바뀌었을뿐 더 무고한 사람이 민주화 뒤에 일어났다.
>당신들은 잊었나 벌써 잊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총에 맞아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늘었는데도 당신들은 재대로 보지 못하는가?
>이정권이 민주화라고 노사모가 어쩔다구 난 우리들일만으로도 미칠지경이다. 그나마 정신을 다잡는중에도 너희들은 끊임없이 가슴에 생체기를 남기고 고문 했다 이중가면을 쓴체...
>우린 빨갱이도 정치적 걸림돌도 아니었다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꿈을 꾸던 이시대의 보통사람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
>정신병원에서 생체실험 안한다고 개가 웃는다.
>개가 웃는거 본적 있는가?
>병동내에서 환자가 폭행을 당하고 방치되도 신고도 경찰은 들어오지도 않고 아예 접수조차 안되는 상황에
>정신병원에서 생체실험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나? 생체실험 안한다고 개가 웃는다.

<덧글>

양성증상인 사람들은 평소에 정상인과 완전 똑같이 생활하며 약이 모자르거나 생활습관이 틀어져 잠을 못자게 되면 악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고의 비약이나 잠념, 가상공간에서의 지시 등 상상력이 정상을 넘어선 이상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고의 황폐화, 극단적 사고로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병이지요. 의사와 환자 자신,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병이기도 합니다. 병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마련이니깐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구해 편의를 봐 주면서 새로 나온 약물을 실용화단계 이전에 임상실험을 하는 건 있습니다.

제목: 국정브리핑, 홍보매체로서의 역할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국정브리핑 웹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예전보다 일방적인 홍보매체로서의 폐단은 많이 줄어든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덧글도 모든기사에 달 수 있게 되었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로그인 접속이 메인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전에 한번 전화드려서 말씀드린건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었네요. 진정으로 국정브리핑이 정책홍보와 국민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는 정보지라면 이같은 사항들은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제목: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그래도 수령액 많다.

요새 직장인들 보면 독신들도 꽤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될텐데 "더내고 덜받는" 개혁을 하면서 유족연금이다 노령연금이다 뭔가 좀 생색내고 딴마음 품고 있는것 같아 씁쓸하네요. 핵가족에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다 내는게 국민연금이고 유족연금도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건데 뭐그리 재정적자다 말들이 많은건지 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재정적자다라고 호소하며 생색을 내는 전략보다 연금으로 나중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호소하는 쪽이 더 모양이 좋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신들은 직장다니고 연금내면서 혹시나 65세도 되기 전에 죽게 되면 연금도 못타는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제목: 평준화와 우리사회 교육시스템...

"평준화"라는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런 상황이 생각났다. 멀쩡한 학생들과 개별적 관리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뒤섞여 있다면 과연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장애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일수도 있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학생이거나 뇌성마비 혹은 지능이 뒤쳐지는 학생이 아니면 과거에 경쟁에 낙오되어 자신감을 상실하여 병을 얻은 정신장애자라고 치고 상황을 판단해 보자.

과연 이런 이런 정황 속에서도 그 알량한 "평준화"를 끝까지 고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한 교실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한 마디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잘못된 발상 그 자체다.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며 장애자들에 대한 일종의 무시며 무척 배려가 부족한 처사라는 걸 말해보려고 한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자들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별도의 시설로 작은 모양새를 갖추며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시설과 교육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위에 언급한 정신장애자들 또한 사회가 밀짚하다는 이유로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되어 일반인들조차도 감내하기 힘든 교육과정을 어쩔수 없이 이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사회 각종 교육시스템의 현주소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설사 이들이 기적을 이루어내어 과정을 모두 다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부딪히게 되는 냉혈한 직업현장에서, 좌절의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악순환은 쉽사리 예고할 수 있는 사태다.

요사이 우리 주변환경을 보면 나라에서 참으로 많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훈련비용까지 대주면서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고마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면의 고충이나 문제점을 아는 노동부 관계자나 고위직 공무원, 아님 해당 전략담당자들이 적다는 점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선 적어도 그들이 왜 그런 병을 갖게 됐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장애가 있는지 정도는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수정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면 투자대비 효과도 어느정도 회수할 수 있을텐데 추가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평준화"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다. 다루기 쉽고 골치아픈 일도 없고 간편한 발상이다. 그러나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조차도 그리 반갑지 않은 단어로 떠오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거기엔 그들이 말할 사정으로 견디기 어려운 낙오의 과정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답글>

많은 수의 엘리트 양성이 나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머지 구성원들도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 있으므로 모두가 성장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엔 장애인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궁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엘리트보다 못하는게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어떤 장애인이 평생 컴퓨터를 옆에 끼고 살았다면 컴퓨터에 관한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궁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세계최고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답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엘리트의 양성을 위한 것이나 장애인들(혹은 뒤처지는 구성원들)을 위한 개인별 관리를 위한 것이나 둘다 평준화를 통해선 어렵지 않을까요? 특성화되고 개인화된 관리가 비록 비용과 시간은 많이 들어도 좀 더 고차원적인것만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그런 전략을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제목: 직업학교 근로자들도 공무원화 추진해야...

직업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공무원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정작 공무원화 추진해야할 분들은 다름 아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교육 및 진로지도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바랍니다.

제목: 홈페이지가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말에 전 동대표 회장이셨던 이정석님도 보이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네요. 그 친구는 이 글을 볼 수 없을 테지만 말에 1단지 주공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윤찬아, 너는 너무 욕심이 많은것 같아.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살다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뉘통수도 맞을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너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가서 정신차리고 앞가림하면 되는거지..."

이 말에 난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고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뒤돌아 그 말을 되씹어 보니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현대인들은 남한테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허나 중요한건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상식을 중요시하여 서로간의 상식을 지켜주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가 되면서 직장 생활은 별로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때 어떤 사람은 참으로 순진하게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떤이는 같은 직장인이면서 정말로 한심하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걸 지켜보았습니다.

올릴 문서3.txt

인생이 힘들때 형한테나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세상은 온갖 종류의 모순과 폭력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제도며 조직이며 개인들간의 알력 등등에서...

그래서 전 이런 부조리와 모순, 그리고 불합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다름아닌 사회 구성원 각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 입장바뀌 생각할 줄 모르고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 상식을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데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식을 목숨같이 지키고 인간관계에 있어 가치지향적이기보다 분수를 지키고 도의적 관계를 설정할 줄 아는 인간들로 넘치게 된다면 정말로 이 사회는 아름답고 편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또 말이 길어졌네요. 금요일 밤, 편안한 잠자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FAX: 02-360-2710)

발신인: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 308동 403호 이윤찬
(☎ 02-883-5482, 010-4444-5482)

제 목: 청와대 브리핑 홈페이지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기타고충)

제가 “청와대브리핑”의 열린마당>회원게시판을 이용할 때 힘들게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지난게시판으로 옮겨지면서 없어져 그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청와대 브리핑”의 홈페이지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만 국정홍보처 운영지원팀(☎02-2100-2845)이나 정부종합민원(☎110) 상담원들도 모른다고 하고 청와대 민원실(☎02-737-5800, 02-730-5800)로의 창구밖에 없다고 하여 청와대 쪽에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자동응답메시지밖에 나오질 않아서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응답전화나 답변은 없고 “인터넷신문고”로 접수하라는 메시지밖에 받질 못해서 “청와대 브리핑” 인터넷 담당자와의 통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오늘 4시간 가까이 상담원들과 연성을 높여가며 싸웠지만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청와대란 곳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인터넷 매체(청와대 브리핑)에 관련한 문의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곳이고 또 국민의 가려운 구석을 더욱 가렵게 만드는 곳이었구나 하는것에 치가 떨리고 관청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상담원들의 쓸모없는 답변에 더욱 힘든 하루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만 있는 것은 아닐진대 국민이 작성한 게시물이 삭제되어 문의를 하려고 해도 어느 공무원도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 현실을 깨닫고 정말 대한민국이 싫어지고 죽고 싶기만 한 하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두가지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첫째, 청와대 브리핑이 국민에게 청와대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열린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호소통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홈페이지에 관한 문의 사항을 듣는 전화창구 하나는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의 홈페이지상 오류신고나 웹마스터 문의는 사실상 답변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고 청와대 민원실도 전화응대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잖습니까? 이것이 첫째 민원입니다.

둘째, 제가 처음에 문의드리려고 했던 청와대브리핑의 열린마당>회원게시판의 제 게시물들(ID:blrun)이 왜 이전 게시판(칭찬격려방, 비판질책방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으로 옮겨가면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청와대브리핑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이렇게 팩스를 띄우니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은 사양하고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 이번에는 꼭 관철시켜야겠습니다. 그럼...

제목: 전화응답시 잡음 넣는 교활한 사람들...

우리는 평소에 전화로 관청이나 서비스를 하는 크고 작은 회사에 민원이나 진정을 올릴때 심각하게 민원내용을 말하면 중간에 상대방이 뜸다가 "뜨르릉~" 혹은 "뚝,뚝" 하는 잡음을 넣는 교활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런 행태는 일반 통신회사의 고객센터나 관청의 민원부서, 심지어는 청와대 자동응답기에서도 흔히 볼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유창한 말솜씨의 맥을 중간에서 끊어버려야 할때 교활한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다 아는 수법인데도 상대방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바른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든 입막음을 하려고 이런 결례를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이런 여직원들이나 전화응대자들을 만나면 속으로 "참 불쌍하다 그걸까지 해서 이겨보려고 하나" 하며 더욱 오기가 나서 염장을 질러놓곤 한다.

물론 어떻게 잡음을 넣는지는 관심도 없고 내가 테스트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떤 간단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것만은 분명하다. 승부를 하려면 정정당당히 해야지 이런 교활한 수법을 통해 상대의 기

를 꺾어보려는 수많은 상담원들과 관청공무원들은 오늘부로 스스로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혹 저와 비슷한 경험을 앞으로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적시해 호통을 쳐서 따금하게 주의를 주도록 하십시오. 깨끗하게 잘 들리던 전화가 왜 잡음이 들리겠습니까? 그것도 잡음 같지도 않은 잡음이 들리는데 말이죠. ^^

<덧글>

이걸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전화두대만 있으면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대는 받고 다른 한대로 잡음을 넣는 거지요. 아님 한대가지고도 얼마든지 잡음을 넣을 수가 있지요. 사전 준비만 하면...

또 한가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통신실에서 유선전화를 중간에 도청해 잡음을 넣는 거지요. 한마디로 도청 전담자가 통화내역을 감시하면서 장난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능성일 뿐이라는걸 알려드립니다. 유선전화 도청 쉽다는것 다 잘 아시죠?

사실 '도청(盜聽)'이 아닌 '감청(監聽)'이란 용어도 똑같은 용어인데 관청에서 국민들의 통신장치를 합법적인 양 도청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도 언어를 그런식으로 자기를 편하게 멋대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자행하는 곳이 정부기관이죠. 정말 입맛떨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도청하는 곳이 많이 있죠?

제목: 지하 환풍구 창문 청소불량

지하1층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바닥이 보기 흉하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곳 환풍구 창문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두가지는 예전에 제가 다 청소아줌마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랜동안 시정이 안되고 있어 명쾌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목: 박명자님 댓글

이곳 게시판들도 대외적으로 전격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보게되면 관리소에서 별로 신경을 안써요. 아파트값 올리는데도 부정적이고...

국민들의 고충을 공무원들과 연결해 준다는 대통령 소속 인터넷 신문고도 공개민원을 올리면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사전 분류해 지네들 입맛에 맞는 처리사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고 쪽에 왜 공개민원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한마디로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다 공개되면 여론형성에 불리하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일처리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불리한거죠. 박명자님의 하소연을 보니까 오늘일이 생각나네요. 이런 작은 홈페이지의 불합리는 그런대로 참을 수 있지만 신문고와 공무원들의 그런 안이한 행태는 정말 두 눈 뜨고 못봐주겠습니다.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이 있는데 둘다 비공개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인터넷의사소통의 통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목: 청소 민원

저도 박명자님 생각이 맞는것 같은데요 우리 아파트는 지하층의 통로도 많고 자동문 같으면 세대 인터넷폰과 연결되던지 신분확인 같은게 필요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제는 우리아파트에 경비가 수십명 있고 매번 계단을 청소해도 또 더러워지고 지하층 환풍창문 같으면 한번도 닦지 않는 배짱을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답변 않하시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관리사무소가 청소에 대해서 꼼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곳곳의 벽면이나 바닥에 더러워진 것도 수시로 닦고 청소하며 수상한 사람이 세대나 아파트 공동구역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잘 감시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의 수선충당금(장기수선 충당금 아님)으로 뭘하는지 그런데 돈 안쓰고 매번 엉뚱한데 돈이 지출되는것 같습니다. 관리소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좀 해보세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되어 꼭 필요하고 긴요한 시설투자에 쓰여져야 합니다. 또 주차충대한 하자가 생길시 써야하는 돈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파트를 품격높게 유지하는데 써야할 돈이기도 합니다. 근데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가지고 돈을 쓰는 방법은 매우 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동 12라인 주차장쪽 진입로 아스팔트 공사를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공사로 땀질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믿고 맡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게 많이 궁금했는데 꼭 궁금한걸 말씀해 주시는군요. 관리사무소에 가도 회장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약이 바뀌었다나요? 듯도보도 못한 규약이 바뀌었다는데 난 못봤다고 하니까 며칠있다 자료

올릴 문서3.txt

를 보여주더군요. 오늘 텍스트상자 입력창이 왜 이렇게 느려졌나? 컴퓨터도 거짓말을 하나? 밑에 자전 거도 느리게 움직이고 뭔가 좀 이상타. —_—

우리 공개할건 공개합시다. 땃땃하다면 공개못할 이유가 없겠쥬.

제목: 짬뽕이 쓴 글들...

제가 블로그와 칼럼을 운영하면서 썼던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다 날리고 이렇게 최근에 쓴 글들만 남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왜 글들을 날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글 맨

밑에 천리안 게시판이 저의 요새 활동무대입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몸돌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이곳 편집기 글씨가 너무 작아졌네요. 이것도 수정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글을 보기전 바로 수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http://blog.hanafos.com/blrun>

저희 아버지가 부탁한 운세사이트인데 예전에 만들어서 디자인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켜 놓는 시간엔 무료운세를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이 이후엔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

<http://user.chol.com/~blrun>

제목: 최근 올라온 꼬리글

이게 없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이 기능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최근 1일이나 2일간 올라온 꼬리글이 있으면 제목 표식에다 굵게 표시하든지 색깔을 다르게 해주면 사용자가 게시글을 여러번 클릭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목: 도색

그리고 도색은 현관문 밖 외벽 같은 경우는 얇게나마 코팅이 되어 있던것 같던데 그런 데 있는 때는 닦으면 되지 않나요?

제목: 라이언 일병 구하기

미국은 영화에서조차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전 부대가 혼신의 힘을 다해 구출작전을 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당국자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이기적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가족이나 공무원, 혹은 기자가 잡혀 있다면 과연 이런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보도된걸 보면 미국인 기자가 잡혔을때는 포로4명과 교환하여 석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 놈의 협상이 무슨 FTA협상도 아니고 생명이 걸린 문제를 최소한의 손해를 가지고 생명과 맞바꾸려고 하는 정부당국자들의 태도에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납치된 사람들을 죄악시 하는 일부 네티즌들도 한심하고 자기 가족이 잡혀 있다면 과연 그런 말을 쉽사리 떠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한 생명은 우주입니다. 협상에 임하는 외교당국자 당신이 바라보는 우주가 바로 그 꺼져가는 생명이 바라보는 그 우주라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에 관한 최소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부 전체의 공무원들은 죽은 배형규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겁니다.

<CENTER>

<P><EMBED src=<http://user.chol.com/~blrun/temp/abemaria.wma>>
카치니의 아베마리아</P></CENTER>

<댓글>

이 글을 청와대 브리핑 회원게시판에 올렸더니만 사전검열등록보류로 분류돼 버렸네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대요? 애타는 가족들 생각해서 글을 힘들게 작성했는데 이게 등록보류라니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인터넷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자동검열인가 알아보기 위해 '이기적' 이란 단어를 '이 기적'으로 '분개'를 '분 개'로 바꾸어 보았지만 누군가 대기시간을 가지고 사전 검열을 하더군요. 아직까지는 청와대쪽 홈페이지에서만 검열하는 걸로 확인되었는데 다른 사이트는 글썽요. —_— 더 높은 차원의 해커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천리안 게시판에서도 이 글이 삭제되어 알아보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천리안 쪽

올릴 문서3.txt

으로 통보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천리안에서도 협조공문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여 윤리위에 전화를 걸어서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고향을 치니까 "해줄 놈이 있고 안해줄 놈이 있지"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제목: 게시판 관리자님 이렇게 사전검열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납치자들 가족 생각해서 글 하나올렸다고 이렇게 등록보류시키다니 어쩌면 그럴수가 있죠?

그렇게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면 맘 편할 것 같습니까? 또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세요?

제가 올린글 등록해 주세요. 당신은 가족도 없습니까? 단지 직장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구요? 진짜 세상 말세네요.

제목: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 게시글을 사전 검열하는건 어떨습니까?

제가 이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사전에 검열되어 등록보류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이런 국민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인터넷 게시글을 사전검열해 등록보류시키니까?

그걸 보면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게 새빨간 거짓말이란게 다 드러나는것입니다. 한 생명은 온갖 공포에 떨며 죽어갔는데 청와대 당국자란 사람이 국민들 비난이 두려워 인터넷 게시글을 사전 검열한다... 글쎄요. 전 그 '최선'이란 말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데요.

그리고 안좋은 이미지만을 교묘하게 집중 조명하는 언론플레이도 사실상 전 믿지 않고요 국민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준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고 민원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온갖 사연들로 한이 맺혀있는데 자신들의 부실한 답변이 달려지는 것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우 한다는 짓이 타항만리에 잡혀 죽은 국민을 앞에 두고 비난은 면해보자는 '사전검열'과 같은 알파한 수를 씁니다. 그게 청와대와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자 일처리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의 현실이요 고위 공무원집단의 현주소입니다. 사전검열에 관해서는 천리안의 나도한마디에서 아이디 blrun으로 게시글을 찾아 한번 읽어보시죠.

<덧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막힌 답변을 듣고 허탈해서 천리안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그럼 그 글은 삭제했다고 치고 제 게시판주소를 천리안 게시글 말미에 링크해도 좋냐는 말을 하자 "고객님들은 글만쓰고 어떠한 링크를 걸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의미의 말로 얼버무리더군요. 내가 천리안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글쓰게 몇개데 링크도 못걸고 그럼 난 월3300원 내가며 천리안에 기여하고 보기좋게 배반당한 꼴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더군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고 사용자를 위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천리안이 정말 믿고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 10년간 써온 천리안 아이디를 해지했습니다.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현대화사업

전 뭐 누구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 아파트를 위해 어떤 사업을 벌일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견적 나온 것도 장기수선충당금 거의 다 쓸 수도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졌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현대화사업같이 일단 쓰고 보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아파트를 보수, 보완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라도 관리비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한 비용대비 효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파트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관리사무소가 우리동(308동) 1-2라인 주차장 진입로 아스팔트 공사 해놓은것 보십시오. 완전 그런 땀질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줄 알았더니 지난 페인트칠도 말이 많았다면서요? 색깔 선정하며 마무리 코팅을 비롯해... 저도 주택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지만 그리 만족스럽게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전 관리사무소가 꼼꼼히 우리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기본적인 자세부터 다 정착된 후에 그 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지하주차장 바닥이나 외벽을 그렇게 관리하고 지하1층 창문엔 7년 묵은 때가 그대로 있는데 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지금 상황에선 절대로 반대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래서야 뭐 제대로 현대화사업 추진하겠습니까? 반대죠. .. 극구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하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어느분 말대로 CCTV는 입주당시 몇개가 있었고 그 후에 얼마를 들여 무엇을 설치했으며 놀이터보수 같은면 예산 책정된것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 외에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게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 말대로 관리소에서 집행하는 사업마다 예산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재, 단가, 수량 등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

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나온 건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 투표에 대해...

투표할때 당연히 후보자들 이력까지 같이 보여줘야 하는데 일단 투표하고 엘리베이터에 가서 보라는 경비아저씨의 말을 듣고 관리사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심한 일처리가 또 혀를 끝끝 차게 만들더군요. 다들 똑바로 하세요 정말...

맞어요. 사업추진시 주민동의를 얻을때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대충 대충 투표받아서 사업추진하는건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값 시장원리...

전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첫째 진입로는 정문 후문 이렇게 둘로 나뉘어 교통편이 좋은 편이고 둘째 조경은 많은 분의 관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셋째 부대시설은 조금만 나가면 서울대나 신림역 쪽으로 많은 부대시설이 있고 오히려 가까운 곳에 유흥가 등이 있는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넷째 단지내 도로는 외부차량이 유입되지 않는한 충분하며 다섯째 방범시설은 경비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여섯째 주변상권은 조금만 나가면 신림동 같이 복잡한 상권이 없다고 판단됨. 일곱번째 왜곡거래는 조금씩 개선되는걸로 알고 있음. 여덟번째 신림동 주민들의 주민의식은 과거와 달리 이세대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음. 아홉번째 주민조직활동은 과거 주택공사방문과 난곡로 사태때 입증되었음. 열번째 동대표활동 감시는 케이블방송 송출이나 기타 인터넷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이상입니다. ^^;

제목: 방만하고 투명하지 않은 부녀회 활동

오늘 오랜만에 관리비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녀회 활동이 최근에 와서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했다.(4,5,6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보십시오) 부녀회 수입금이 과거 부녀회에 비해 현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간단한 단가와 수량, 품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입이 늘어났으면 더욱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야 하는데 100만원이 넘는 적자살림으로 부녀회를 운영해서 우리 아파트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회장의 이상행동이다. 이런 적자재정 가운데서도 월10만원의 본인 활동비는 교박 챙기는 회장의 파렴치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의 적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적자운영은 지양하면서 투명한 공개노력을 병행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품목(고기면 부위가 될 것이고 꽃이나 나무면 품종이 될 것입니다), 수량, 단가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경로잔치도 그렇고 꽃심기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적자재정이 드러난 이상 회장은 박명자님의 지적대로 관리사무소와 홈페이지에 상기 지적사항을 자세히 비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302동 반상회 안건 댓글

요새 CCTV에 대한 관리사무소와 동대표의 생각은 무척이나 안일하고 방만합니다. 놀이터 CCTV도 아파트가 생길때부터 있었는데 관리도 안하고 요새 케이블 방송도 안합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 아파트 곳곳을 볼수 있는 CCTV와 수상기를 거액들여 설치했는데 구형이라뇨. 이건 순전히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누수와 유리창 페인트는 정말 동감입니다. 승강기 낙서도 방치되고 있구요. 나열하자면 끝이없지만 문제는 관리사무소부터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대표 살아서 아파트 관리나 계속해나갈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_ _

지금까지 CCTV 설치와 녹화장치(DVR) 구입에 전부 합치면 거의 5천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설치돼 있었던 것도 있고 추가로 설치된 것도 있을텐데 이전것을 전부 사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크나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것을 버리고 전부 칼러로 교체한다는 것이 무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꼭 설치해야 한다면 추가품목에 대한 규격명, 단가, 수량 등을 필히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외교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검색창이 이상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다 끌어안고 이번사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피랍자들은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 외교홈페이지란 곳에서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통제하기 위해 게시판 검색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는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라! 게시판 검색창에 작성자와 내용으로 검색을 못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있나? 그래놓고 최선을 다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ㅈㅈ 세상 말세다.

제목: 흐뭇하고 아름다운 소식 댓글

몽마르뜨님이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가시려면 전세놓지 말고 그냥 팔고 이사가세요. 여기서 장황하게 떠드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아파트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와 싸워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별로 아파트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 분들을 보면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지는 못할 지언정 싸고럽다고 이사 운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으면 말리지 않을테니까 언젠가 이사 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화합이 중요하다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치권이 시끄러운 것처럼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잡음이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흐뭇하고 아름다운 소식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울러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목: 아파트 홈페이지 활성화 댓글

제 생각엔 아파트 홈페이지도 지금 비공식적인 가입자수가 250명이 넘어가는 걸로 나와있던데요 이곳 카페는 네이버 특성상 중복아이디를 회원들이 만들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의 거품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는 비실명제라 의견이 활발한 것이기도 하구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목: 꽃나무 박명자님 댓글

박명자님의 뜻은 부녀회든 관리사무소든 운영을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해서 의혹을 불식시키자는 것이지요. 부녀회도 마이너스 예산까지 짜며 두달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는데도 저도 할말은 많지만 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몽마르뜨님 댓글...

시끄러운걸 싫어하신다더니 여러사람들 고소해서 동네 한번 더 시끄럽게 해보시지 그래요 몽마르뜨님. 꼭 그렇게 들리는군요. 몽마르뜨님 옆에 그 알량하고 든든한 법이 있으니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그래요? 그러면 참 주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

제목: CCTV 설치권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았는데요 협조공문을 보낸 경찰서 담당자 왈, 법적으로는 공공지하주차장이나 공동주택지하주차장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는 나와있지만 경찰서에서 실제 구청과의 협의로 실태조사에 나설때는 CCTV카메라와 녹화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유무를 확인하지 지하주차장 몇 평에 몇 대가 설치됐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조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고 사실상 주차장 보안에 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대비할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미비점들만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구청에서는 각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 CCTV 실태를 파악해 정리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관청)지하주차장들에서조차도 현재 완벽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따라서 우리 아파트도 지나치게 많은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번에 CCTV 설치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며 그러므로 기설치한 설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표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주지하시어 이번 사업이 돈만 날리는 날림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의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만큼 강제력이 떨어지는 규정입니다. 법은 국회와 정부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통과된 법률을 기반으로 각부처에서 '시행령'과 그 밑의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상위법인 '법률'에서 CCTV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그걸 규정하 하위법령은 그만큼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밑에 '고시'가 있고 해당 시행규칙은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목: 오줌싸기 댓글

지난번 저희동 지하 엘리베이터 입구에선 우리라인 어떤 아저씨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밤이라고 벽에다 대고 쉬를 하고 있더군요. 그 아저씨 저를 보았으니 누군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글 보고 있으려나? 저는 그 일을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이 이 모양이니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더러 산다는걸 알았죠.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세상이 살기 싫어도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목: 음원, 비친고죄 신설 문제있다.

얼마전 인터넷 음원 사용에 대한 비친고죄 신설(고소없이 처벌)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업자의 상업성에 법률제정이 놓아난 꼴이라 할 수가 있겠다. 링크거는 것은 카피가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음원에 링크를 걸거나 MP3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표면적으로 해당 법 제정한 사람이나 음원관계

자들 빼고 다 사용하는 음원을 가지고 현실성 없는 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집에서 남의 음악을 카피해 듣거나 링크를 걸어보지 않았는가? 이런 법을 제정한 사람의 순수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비친고죄라는 것은 형사법 같은 중대한 범죄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이런 저작권법에도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소수의 특권이자 법률이 상업성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반증이다.

제목: 전문대생에게도 학사 댓글

2년 학교 다니고 실무경력 1년후 다시 2년 학교를 다닌다. 그럼 학사를 따기 위해 4년제 일반대학보다 더 까다로와졌구먼.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나갈것이고 대우는 겨우 학사고. 그 정도 수준이면 석사급인데 학사라, 교육부가 전문대생들한테 좀 짜구만요. 난 또 전문대생들에게도 학사 준다고 하길래 설마 했는데 역시나...

제목: 정부의 기자들 취재 제한 조치, 문제 있다...

미국이라고 다 좋은가? 정부가 이렇게 선진국의 예를 들며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강화하는건 크나큰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 알권리가 기자들의 자유롭지 못한 취재제한으로 침해당하는데 무슨놈의 선진국 운운?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가 이전에 ILO 운운하며 공무원 노조 전담 부서를 만든 것과 다름없는 수법이 동원됐다. 선진국은 다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떳떳하지 못한 처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꼭 보면 선진국의 기술자나 기술력 우대 같은 좋은 것은 따라하지 않고 나쁜 것만 골라서 따라하고 그렇게 가자고 한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매우 후진적인 정통성을 이어받아 정치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난 선진국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에 절대 반대다. 좋은 것을 본받고 나쁜 것은 더 좋게 개선시켜야지 정치인들과 행정부의 치부가 뻔히 드러나는 파렴치한 행위를 따라하는 정부가 매우 못마땅하다. 동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도 주민들이 취재를 요청하면 응하는데 하물며 정부란 거대 책임기관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변격이라 할 수 있는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과거 언론통폐합 같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그네들이 말하는 선진국의 나쁜 폐습을 따라하는 후진적인 이웃국가밖에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일은 매우 유감이다.

제목: 계단 공사 추가 보완

사진 상으로 보기도 너무나 엉성하네요. 손잡이가 없다는 건 그 정도 높이의 계단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기존 손잡이 나무계단이 왜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공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미관상에도 안좋고 공사 해주려면 좀 똑바로 마무리하지 주택공사 왜 이리 무성의한 공사를 해줬을까요? 우리 다시 관리사무소나 주택공사에 계단공사 보완을 요구합니다.

제목: 국정브리핑 기사부터 실명제를...

난 국정브리핑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부터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은 이름 석자나 연락처하나 내걸지 않고 댓글을 다는 국민들만 실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바로 위의 기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다. 어디를 봐도 어느 부서에서 또 누가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 점에 대해 월요일날 담당자와 통화해 보려고 한다. 이런건 즉각 시정돼야 한다.

제목: 이젠 더이상 교육을 인적자원이라 부르지 말자...

지금의 학생들 공부하는것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 그놈의 국가 인적자원정책 때문에 학생들이 쓰잘데기 없는 반복적인 문제나 풀고 앉았고 꿈아터진 학원과 과외에 매달리는 공부기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참 뛰어놀고 호기심을 개발해야할 학창시절을, 또 이성에 눈뜨고 세상과 나, 이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경험해야 할 시절에 국가를 먹여살리는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노동자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는 교육정책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훈련만 생각했지 대범하게 보지 못하고 현대의 갖가지 실업문제나 인구증가율둔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교육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그러한 문제들의 뿌리가, 꿈아터진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필자가 진단하건데 미래에 있어 크나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점을 조심스레 말해주고 싶다. 학교의 개혁, 공교육의 개혁, 사회 인재선발방식의 개혁, 각종 시험의 개혁, 인사담당자들의 패러다임 혁신이 있지 않는한 우리 나라의 미래는 그만큼 더디고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백, 이십대 태반이 백수고 그건 삼십대의 구조적 실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란건 이젠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가다간 지금의 80년대생 이후의 세대들은 잘못된 교육의 소산으로 올바른 결혼관과 국가관, 취업기회 한번 가지지 못하고 또다시 선배들의 구조적 문제를 답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징후들은 공무원시험의 과열, 인구증가율 둔화, IT업계의 노

동력착취와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악화가 잘 말해준다.

이젠 정신을 차릴 때다. 더 늦기 전에 제발 더 이상 교육을 자원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런 발상 자체가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본질'을 놓치면 돌아오는건 '교육적 기형아'일 뿐이다.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에 대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들은 우리아파트 공동재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현재 장기수선충당금도 이자를 불리고 나름대로 아껴쓰면 우리 아파트를 보수하고 치장하는데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가 되는게 아파트 발전이라는 염불보다는 부산물을 얻으려고 젓밥에 탐을 내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에 관한 거품도 생각해볼 부분이구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비와 수입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지만 정작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곳엔 지출되지 못하고 쓸데없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거액이 대거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늘린들 그게 얼마나 우리 아파트 발전에 많이 기여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개선되어 저의 이런 마음이 변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아파트 관리내역을 살펴 보았을때 엘리베이터나 소방설비 점검 및 보수 등에서 영성한 관리실태가 드러난 이상 많은 개선점들이 먼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액이 소모되는 엘리베이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현장 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못합니다. 열쇠도 유지보수업체가 가지고 있구요. 12명이나 되는 인력이 관리사무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대가 직접 유지보수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장은 자주 나는지 기술력도 좀 의심이 가구요...

제목: 교육의 무릉도원

입으로는 누구말대로 교육의 무릉도원을 만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일만 남았다.

제목: 기자실 통폐합 의견...

요새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자 브리핑실 제도' 개악(改惡)안에 대한 갖가지 변명을 위한 변명의 기사들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사건 때는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피랍자 가족들에 대한 순수한 동정의 글마저 정부기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포탈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고 결국 10년간 이용해 왔던 유료 인터넷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까지 번지게 됐다. 게시글이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부정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두려워 인터넷업체에 삭제요청을 했다는 것부터가 정당하지 못하고 유명포탈이 거기에 영합해 자기들의 영업활동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의 동정글을 삭제조치했다는 것이 매우 불쾌하고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꿔나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터넷 개인미디어도 통제하고 보수언론의 기성미디어의 세력마저도 약화시켜서 한마디로 혼자 모든것을 은폐하고 수습하기 위해 정부미디어를 제외한 여타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이런 속셈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변명만을 일삼을게 아니라 진정으로 21세기 3대 미디어(기성미디어, 정부미디어, 개인미디어)가 상생하고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요사이 같은 인터넷 시대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전자민주주의 실현이 사실상 가능하므로 시들해진 이런 논의의 불씨를 되살려 민주주의(民主主義-국민이 주인인 세상)의 참 뜻을 실현할 의지는 없는지 되묻고 싶다.

그것이 진정 정부의 중대한 역할이 아니지 않은가?

<덧글>

송고실이 뭐냐 독서실처럼 생겼네요? ^^ 기자들이 받아쓰기 해서 워드편집해 보내는 사람들도 아니구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말이죠... 제가 아는 기자들은 몸으로 뛰고 취재해서 성의껏 작성한 기사를 공표하는 사람들로 기억하는데... 물론 기자들의 소양과 양심도 가지각색이고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싸잡아 기자들을 몰상식하고 나쁜 세력으로 매도하는 건 적어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경비아저씨 동의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서야

방금 전 경비아저씨로부터 아파트관리규약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찬반 동의서를 보았는데 이런 중요한 동의서에 왜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0표로만 찬, 반 구분을 만들어 기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_ _

올릴 문서3.txt

이렇게 되면 동의서를 직접 방문해 기재받지 못한 세대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임의대로 0표 처리해 관리사무소나 동대표에서 임의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적어도 서명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세대별 동의서 명부 및 취지 상단 각 페이지엔 동의서에 대한 명확한 전체제목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들은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 필수적 사항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자의가 의심스러우며 그 비상식적이고 태만한 일처리는 반드시 지적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의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들이댈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걸 순전히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싹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관리사무소나 동대표회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시죠.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월요일날 분명 이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통합브리핑제?

오늘 SBS 8시 뉴스 줄 기사를 보니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분리된 또다른 민주공무원노조를 서울 남부지법이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물론 세부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보도도 한 줄로 끝나버리는데 무슨 통합브리핑제? 이런거 정부에서 언제 발표한적 있습니까? <http://run.iptime.org/>

삼성전자 같은 사기업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 공직계 내에서 이런 공무원노조를 여럿 인정하더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공무원노조만도 네다섯개는 되네요.
<http://run.iptime.org/>

제목: 게시판 글씨 크기 댓글

여러분, 이곳 게시판에서 글을 쓸때 편집기에서 글씨가 작게 보이는데 "size"버튼을 눌러 크기를 적당히 선택한뒤 글을 써야 글씨가 잘 보입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수정을 부탁했는데 수정계획이 없다며 그냥 쓰라고 하더군요. 정말 입맛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목: CCTV 구글 검색

http://dccctv.com/mall/m_mall_list.php?ps_ctid=03030000

가 세부주소이고

기본주소는

<http://dccctv.com/> 입니다. 이곳에서 유명회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네요.

우리도 가격정보를 알아야 견적이 썬지 비싼지 알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고계신 정보 있으면 올리세요. 이전에 관리사무소에 비슷한 규격의 DVR을 설치한건 맞구요. 문제는 추가설치인데 2억이란 상상도 못할 가격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쯤~~

"스탠드얼론 DVR" 이나 "DVR PC BASE" 란 검색어로 찾아보세요.

제목: 오로라님 관리주체와 대표회의 위탈법 댓글

저도 얼마전 관리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소장이 지하주차장 카메라가 48대 있다고 한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DVR은 예전에 1000만원이상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낡았다(?)고 하네요. 물론 그 후로 카메라도 추가해 더 설치했구요. DVR같은 경우는 오래됐다 하더라도 하드를 갈아서 쓰면 사용가능하고 추가 설치는 글썄요... 관리외수입은 몰라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반대입니다.

제목: 여러분은 정반합의 원리를 들어보셨습니까?

<P>우리가 보통, 어떤 합의나 토론을 하는 과정이란 것이 어떤 정(正)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반(反)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합(合)이 도출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우리의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된게 그 논(論)의 반(反)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는건지 아니면 문장력이 모자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엔 합(合)이란 도출과정이 없습니다. 그런 정반합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움직이는건데 우리 아파트엔 위에 오는 반합(反合)의 과정이 없습니다. 이런 정반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룰수 있는 오류가 예전에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를 운영했던 홍지기님처럼 한쪽의 의견이 불만스럽다고 하여 거기에 대한 반(反)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P>

<P> </P>

<P>결국 그것이 홈페이지 폐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물론 거기엔 개인적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가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판을 깨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중한 홈페이지가 각고끝에 생겼지만 그때 당시엔 우리아파트의 공론의 장인 홈페이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입고 허탈해 했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일단 적어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홈페이지를 지키되 끝까지 정

올릴 문서3.txt

반합의 과정으로 공론의 장을 이끌어 나가자. 근데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것이 옳고 그른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의견들에 대한 관리주체나 동대표단의 반박이 있습니까?</P>

<P> </P>

<P>이것이 우리 아파트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오해가 커지고 결국엔 모든 것이 파탄나고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 도와드리겠어요니 반박할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십시오. 그런 반합(反合)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 아파트는 계속 정체되고 어쩌면 과거와 같이 되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저의 충심어린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어 우리아파트가 역동적으로 거듭나 발전할수 있도록 애써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파트 발전과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에 관계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체면같은건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결국 그런 반복적인 과정속에서 새로운 합(合)들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해 각자가 인정하고 책임지면 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ENTER><EMBED src=http://run.ipstime.org/data/wind.wma type=audio/x-ms-wma>
우리국악 - 물같이 바람같이

<CENTER>

<P></P></CENTER></CENTER>

<댓글>

삼성산 뜨란채 카페에서 벌어지는 서로간의 댓글들도 어떻게 보면 뜨거운 정반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댓글이 논거나 논리의 전개가 아니라 인신공격이나 헐담, 욕 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카페에서 특히 그런 이용자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어 자신들의 토론 수준을 한층 높여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게시물 삭제에 대하여...

위에서 제기하신 내용중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 지적합니다. 2번에 퍼온글, 정보의글, 비방글 등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글"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와 판단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퍼온글이나 단순한 비방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관리자의 횡포가 남발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게시판 삭제원칙과도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저도 게시판을 운영하지만 일반적인 게시물 삭제원칙은 음란성 게재글, 상업적인 광고글, 돈벌기 사이트, 반복적인 게시물 등입니다. 근데 회장이님 말씀하신 것은 이 기준에 매우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인터넷 상에 제출된 자료는 자료가 아닌건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참 기가막혀서... 당신 누구요? 또 하나의 아파트 자생모임인 카페가 있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인데 삭제라니. 당신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주시오. 세상 살다보니까 별꼴을 다 보겠네. 010-4444-5482

강윤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벽에 발로 사람들이 문뎀다고 침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보기 싫어 모두 대리석으로 바꾸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쳐발라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사무소가 청소를 하여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까요? 현재 관리사무소가 휴지 같은 건 잘 줍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아파트입구 외벽 청소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지하엘리베이터 환풍창문만 해도 더러운것 청소 안해서 지저분한거 강윤구님도 잘 아시잖아요. 또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바닥 더러운것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죠. 기본적인 것부터 다 갖추어진 다음에 돈 쓸 공리를 해야지 기본적인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위에 집을 지어봤자 사상누각이 될게 뻔합니다.

이성수님 전화 받지 않으셨죠. 앞으로 전 회장님 절대 만나지 않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화 거부하는 사람은 저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회장님이 하시는것 같은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원칙을 회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정말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를 그런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냐구요? 제가 토론글에 올린 글 못 보았습니까? 우리 대화하려면 공정하게 페어 플레이 합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회장이라구...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회장의 입장에 대해

회장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6가지 사업인가요? 엄청난 금액을 주민들에게 들이대고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 문제가 되자 다시 장기수선계획서 수정하고 다시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했지요. 또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장기수선계획서에 나와있는 엄청난 산정금액과 수선충당금과 중복된 산정금액, 장기수선충당금 인상금액의 과다(7배), CCTV 추진사업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아님)을 매년 예산잡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것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고 장기수선계획은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점차 일정비율씩 늘려가면 됩니다. 지금 7배 인상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막히게 된거죠. 물론 회장은 이것이 단지 12년 계획으로 본 인상안일 뿐이라고 하였지만 아무리 향후 12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고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움에 있어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회장이 홈페이지 운영에 간섭하여 주민의 아이디를 강제탈퇴시키고 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고 홈페이지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민의 아이디를 강제탈퇴시켰

습니다. 아닙니다 주말인 어제오늘 관리소에 사람이 없는데 회장이 홈페이지 관리 전권을 가지면서 이
이용약관 운운하며 이곳 카페주소를 링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아이디를 강제탈퇴시켰습니다. 이게 말
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래 이용약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위반한 사항이 없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게시판의 자유
로운 의견개진에 최대한도로 노력해야할 운영자의 의무사항은 없는데 반해 이용자의 제약사항만 늘어
놓는 등 한마디로 5공시대의 언론통제, 그것보다 더 심한 회장의 횡포가 홈페이지 운영의 손길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홈페이지가 회장 1인의 사유물인양 말입니다.

밑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인데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홈페이지
를 얼마든지 제약할 수 있는 독소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자가 판단시 적절치
않은 내용인 경우 3차 경고후 강제탈퇴시킬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사무소 직원의 판
단이 아닌 회장의 판단이 들어가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아이디를 강제탈퇴시키고 있습니다. 아래의 어
느조항에도 운영진에 회장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없고 회장의 지시아래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습
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홈페이지는 관리사무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를 명확하게 내걸고 있으면서
도 말입니다.

물론 그 독사같은 회장이 이 글을 보고 이용약관을 다시 수정하려고 하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
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덧글>

또 그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모호하게 약관을 적용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를 건 것이 적절치 않은 내용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장의 판단입니까 관리소의 판단입
니까?

덧글: 회장의 홈페이지 이용권한

회장이 홈페이지에서 이곳 카페 링크를 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강제탈퇴 안하겠답니다. 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_ _ _

방금전 회장하고 몸싸움 할뻔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인증을 안해주냐고 하니까 바로 위의 덧글가지고
문제를 삼더군요. 내가 할 소리를 저보고 이중인격을 쓴다고 하더군요. 카페 링크를 안걸면 인증해주
겠다고 하고선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하니까 저의 카페 덧글을 들먹이며 인증해주기 싫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도 모르고 비정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망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는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도움이 안될 것 같으니
까 인증해주기 싫다는 뜻이지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대하기 싫다 내가 사라져주겠다. 하지만 홈
페이지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운영한다고 하지 말고 회장이 운영한다고 그렇게 때문에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뒀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는 회장 1인의 사유물임이 그대로 드러났습
니다. 그 자리에서 관리소 과장도 우린 아무 힘이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거든요.

참는다고 보다 우리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법
의 하위규정 같은걸 만들어서라도 법률적 기반을 닦고 언론에도 보도돼야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힘없는 백성이 참아야 한다고 치부해 버리기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소
지가 큼니다. 이런 아파트 공론의 장이 1인 사유물이 되어서 안되는 거지요.

제목: 정녕 타인을 위해 싸워본 일이 있는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천리안에 피랍자 관련해서 동정의 글을 올렸다가 천리안 측의 일방적인 통
보로 삭제를 당했습니다. 정부의 공문이 있었고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 여기서 뻔뻔스럽게 보도가 압력을 받은적이 있냐고 물으시는군요. 정보보호진흥원 담당자와도 통화
를 했었는데 일반국민의 글도 이렇게 감시당하는데 기자들의 글은 어련하겠습니까? 물론 피랍자 사태
가 좋게 결말나서 다행이지만 삭제건에 대해선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이슈였습니다.
<http://run.ipstime.org/>

제목: 정부의 재정건전성...

다 그럴듯한 애긴데 22조원이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예산내역도 대충 파악하고 있고 거기서 복지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잘 아는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문(경찰,국
방,교육,SOC)의 구조조정을 논해야 할 시점에 복지예산 감축이라 좀 기사가 정돈될 필요가 있을것 같
습니다.

제목: 영화 "D- War"를 보고...

언론에서 하도 대서특필하고 주위에서도 좋은 평이 있어서 오늘 속는 셈치고 용산 갔다 오는 길에 "D-
War"를 감상하였다. 예전에 영화 "쉬리"로 한번 속은 경험이 있어 주저했었는데 7천원이나 하는 거금
을 주고 선뜻 영화를 보았다.

헐리우드 SF영화에 길들여져 있는 나에게 한국 SF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시나리오며 독창성, 그래픽, 긴장감, 감동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래서 참지 못해 본 영화지만 전체적인 평은 헐리우드 SF영화를 91점 주고 싶다면 이번 영화는 한 59점 정도 되는것 같다.

영화의 전반부가 너무나 지루해서 사기당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후반부의 빌딩에서 헬리콥터가 나오는 전쟁씬은 스릴감이 있어서 좋았던것 같다. 승천하는 용의 디자인도 좋았고 독창성도 어느정도 있었는데 한가지 이 영화의 치명적인 단점은 시나리오가 너무나 빈약하고 동물들의 그래픽 효과가 단조로웠다는 점이다.(마치 여러개를 복사해 놓은 듯한...) 여기서 시나리오가 빈약했다는 뜻은 내용이 너무 쉬웠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은 어렵지 않더라도(내용은 어려울 필요가 없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개연성(사실같은 픽션) 및 스토리의 긴박감을 비롯한 감동 그런것들이 많이 부족했던것 같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고 난 뒤에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영화지만 그래도 후반부에 이 영화가 보여준 장면들은 한국 SF영화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만든다. 물론 끝의 자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가 한국인 스텝들로만 제작된 영화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더하면 더 좋은 한국산 SF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은 명작, 또 보고 난 다음 남는 끝없는 감동, 그런 것들을 고루 갖 추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높은 평가를 해야할 것이다.

<추신>

내가 가장 감명깊게 보았던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특수효과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명작들은 우수한 시나리오에 스토리 전체에 걸친 시의적절한 특수효과 또 각 장면들에 들어가는 음악과 음향 효과 하나하나에도 매우 신경쓰는것 같았다. 반면에 D-War는 음향효과는 뛰어났는데 반해 음악은 빈약했다.

이상 영화를 보고 난 뒤의 소감이었습니다.

<덧글>

1.개인적으로 또 하나 감동적으로 보았던 SF영화는 "AI"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헐리우드 영화인데 정말 SF의 귀감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못보신 분들은 DVD를 구해서 함 보세요. 훌륭합니다.

2.평론가의 평인데 나름대로 날카롭네요.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함 읽어보세요.

=====

<디 워>는 영화 내외적인 가치 평가들이 충돌하는 각축장처럼 보였다. 심형래라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편견들이 수없이 충돌하고 있으며, 한국산 브랜드의 자족적 기술력에 대한 방어 본능과 순수한 영화적 완성도에 대한 의심이 충돌하고 있다. 이는 이 지난한 논쟁의 바로미터인 <디 워>의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논란의 거둬들이 관심을 증폭시키는 부가 효과를 창출한 덕분이기도 하다.

일본의 기획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일본어 구사 능력을 획득한 보아의 일본 진출 성공기는 시장을 제압하는 콘텐츠의 발굴보단,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의 생산화가 효율적일 수 있음을 설득시킨다. <디 워>는 한국 영화가 궤할만한 해외 시장 맞춤형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할리우드 배우의 캐스팅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LA 도심에 포커스를 맞추며 지정학적 익명성을 건넌다. 이는 <디 워>가 애초에 내수보단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CG와 미니어처를 통한 특수효과와 심본 발취와 스케일의 와이드 릴리스를 통해 영상적 퀄리티와 스케일에 치중한 것도 시각적 월등함을 내세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벤치마킹한 상업적 전략에 가깝다.

<디 워>의 비주얼은 평가할만하다. 특히나 이무기의 도심 난입과 대규모 전투씬은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무기의 생생한 질감과 역동적인 움직임은 할리우드의 그것과 비견할만하다. 하지만 <디 워>가 전면에 내세우는 비주얼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씬마다 완성도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 중, 완성도가 뛰어난 도심 전투씬은 할리우드의 그것과 비교할만한 능력치를 보이니 이 외의 몇 장면들은 상대적인 부족함이 눈에 띈다. 특히나 극 초반, 조선 시대의 회상 장면 중 브라퀴 군단 출몰씬은 후반부의 비주얼과 비교했을 때 마치 온라인 게임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어색하다. 또한 결말부의 이무기 대결씬은 육중한 몸체에 비해 형체가 선명하지 않아 사실적인 명확함이 떨어진다. 또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다양한 크리처들의 압도적인 몸놀림에 비해 미니멀한 브라퀴 군단은 모양새만으로도 유지하고, 과장된 움직임은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듯 어색하다. 이는 진지함을 떨어뜨리며 극의 시각적 쾌감마저 반감시킨다.

<디 워>가 지닌 극명한 단점은 이야기의 열악함이다. <디 워>는 한국의 이무기 전설을 현대의 LA에 구현시키며 SF 판타지의 영역을 구축한다. 한국의 전설이 미국의 현실에서 복원될 수 있음은 소재의 지적학적 한계를 넘는 새로운 시도로서 인정받을만하다. 하지만 효과보다도 연출이 튼다. 마치 조선 시대 회상씬은 마치 TV의 재현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하고 브라퀴 군단의 출몰씬은 여지없이 유년기 취향의 특촬 장르인 전대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느슨하다. 특히나 추격의 대상이 되는 인물 앞에서 의심스러운 정도로 반사 신경이 한 박자 느려지는 이무기는 추적전에서

느껴져야 할 스틸을 먹어 치운다. 위기 의식 자체가 걸려된 관람은 스틸이 가미되어야 할 영상을 관망하게 하며 지루함을 낳는다. 인물간의 관계적 설득력이 떨어지고, 행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조력자인 잭(로버트 포스터)이 정체를 감춰야 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이무기의 출몰에 당황하다 모 든 사실을 삼시간에 파악해버리는 FBI 요원의 태도 변화는 우격다짐이다. 특히나 이단(제이슨 베어)과 새라(아만다 브룩스)의 키스씬은 규명할 수 없는 정서의 난입 그 자체다. 들쭉날쭉한 이야기의 구성과 전후 관계의 설명이 불충분한 전개의 미흡함은 전반적인 영화의 질적 하향을 주도한다. <디 워>의 이야기는 단순하기보단 허술함에 가깝다. 극적인 전개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무기의 시각적 재현은 단지 전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디 워>가 제시하는 한국적인 요소란 단지 한국의 외형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정서가 걸려된 무지한 활용은 어울리지 않는 듯처럼 어색하다. LA 로케이션으로 이뤄진 영화에서 조선을 배경으로 한 회상씬이 도입되고 한국어 대사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이무기 전설이 배경이 됐다는 것만으로 <디 워>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가란 물음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는다. 한국산 소재는 영화의 배경으로 존재할 뿐 정서로 스며들지 못한다. 마치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아이를 성장 배경을 무시한 채 한국인이라 규정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디 워>가 지닌 영화적 모토는 온전히 할리우드의 것이며 그들의 정서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디 워>는 한국을 일부 차용한 할리우드의 신기한 모방물에 불과하다. 극 말미에 흐르는 아리랑이 <디 워>를 한국적이라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디 워>는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를 모방하는 것이 장르적 대안이라 말하는 것 같다. 심형래 감독의 열정과 끈기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지 비주얼의 소모품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는 그의 생각은 지지하기 힘들다. 물론 추후 다른 시도를 거듭하며 단점을 보완한다면 더욱 나은 성과를 보장할 수도 있다. <용가리>가 <디 워>로 허물을 벗기까지의 과정은 그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습작을 거듭하기엔 자본의 소모가 크다. 결국 장점에 비해 단점이 무수한 <디 워>는 열정적인 이상이 실력의 한계를 메울 수 없는 괴리감만이 확인된다. 이야기의 자질이 무색한 것을 둘째 치더라도 이야기의 공백을 보충할만한 비주얼도 부분별로 완벽하지 않다.

물론 국내의 입지에선 괄목할만한 성장이나 이미 몇 걸음 앞선 할리우드의 그것과 비교하면 특별해보이지 않으며 자본의 열세도 극복하기 힘들다. 다만 <디 워>의 성과는 특수 효과를 필요로 한 특정 장르의 표본 사례로 활용될만하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의 영화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건 다소 안타깝다. -개인적으론 침통한 심정이다- 특히, <트랜스포머>가 시각적 기대감을 높여놓은 최근 시류에 <디 워>의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 보인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디 워>에서 파괴되는 LA도심은 이미 <트랜스포머>가 한 바탕 뒤흔었던 그 자리다.

제목: 우리 아파트 굴뚝

제 생각엔 옥상 굴뚝에다 배출기 같은걸 달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기술적 소견을 내고 싶은데요. 지금은 예전에 70년대에 쓰던 것과 같은 바람개비만 달려있어서 가스배출효과가 떨어져 방도 따습지 않고 난방원리를 생각해도 배출기를 달면 훨씬 보일러의 열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지만요.

제목: 시험은 수단이지 교육적 목표가 아닙니다.

전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고교교육정상화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교육은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내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모를 정도로 교육적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나온 문제지들을 가지고 풀기도 어려운 기이한 문제를 붙잡고 시험을 위해 목매드립니다. 우리가 왜 시험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도 모른채 시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단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테스트일 뿐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려고 해도 대입이라는 엄청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정작 대학교육을 마치고 나서 사회에서(심지어는 공무원선발에서조차도) 요구하는 것까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또 엄청난 시간과 돈, 심력을 허비해야 합니다. 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인재를 선발할때 시험이라는 전형요소만 고집하지 말고 또 그 비중을 강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양한 전형요소와 평가기법을 개발해 그것이 진정 새시대에 걸맞는 인재선발방식인지 충실하게 고민해 우리의 전통적인 시험의 굴레에서 취업준비자들과 학생들을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창의는 책상에서 머리띠 둘러매고 시험문제 푸는데서 길러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회체험과 교육, 호기심개발, 적성개발, 탐구활동 등으로 길러지는 것이지요. 근데도 우리 대학은 21세기 시대의 오늘까지도 전통적인 시험선발방식을 내세우며 대학의 자율성을 고집합니다. 근데 자율성을 주면 우리 사회의 변화속도는 그만큼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정부가 개혁해 나가는데 동참하면 대학도 변화되고 같이 공교육도 변화되며 어쩌면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사회전체의 인재선발시스템이 조금씩 바뀔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본질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지금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선발하며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진국과 겨뤄나갈 수 있는 길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시험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시험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교육적 목표를 위한 무수한 전형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CCTV 안내문 댓글

우선 예전 장치들을 모두 버리고 DVR, 모니터 및 CCTV를 칼러로 427대나 바꾼다는 것부터가 무리입니다. 어른들이 그러더군요 구형이 도둑잡을지 신형이 잡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구요. 그리고 안내문에 기존 DVR 있는것도 표시하지 않았구요 또 새로 설치할 DVR 채널수와 CCTV 대수가 일치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비율이 맞지 않아 보여요) 거기다 더욱 큰 문제는 관리비외수입에서의 지출이 아닌 2억이 넘을 수 있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로라님이 올리신 글을 꼼꼼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결날짜와 동의 날짜의 모순,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다사용에 관한 문제, CCTV 입찰공고 게시여부 등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번 CCTV 계획안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안내문 보셔서 알겠지만 그 2~3억이란 제시금액도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공개경쟁입찰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또 정작 병행해야할 유명 인터넷사이트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입찰정보지에 입찰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놓고 주민들에게 이런 거액을 제시한다는 것도 왠지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입니다.

제목: 카페 토론방에 대해...

요사이 TV 뉴스가 정말 볼것 없고 편향적이라는 내용으로 토론방에 글을 쓸까 했는데 6등급으로 나눠어져 있는데다 두단계나 등급이 이뤄져야 글쓰기가 가능하네요? 글읽기도 한등급 등급이 돼야 가능하고 전에도 오로라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얘기 뿐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면서 살자구요. 이 카페 원장이신 비즈논객님에 대해(연락처나 사는곳) 제가 전혀 몰라 이렇게 '알립니다'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곳 카페가 좀 더 다양한 이야기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 이런 모든 토론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이젠 '등급'같은 '관막이'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미래엔 그런 사고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모든 네티즌이 평등한 세상,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원장님 그럼 부탁드립니다.

<댓글>

비즈논객님의 성실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비즈논객님을 위시한 카페회원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 그런 삼성산아파트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달려있겠죠. 쉬운거 같아도 무척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련 분쟁 판례...

좀 시기가 지난 판례이긴 하지만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도 많은것 같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관리기구(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 사단이란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문제(법적 공백사태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큰 사법적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둘러 대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주)를 달았는데 요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부분, 법령명이 바뀐 부분 등은 여러분들 각자가 찾아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지요. 각각의 문단이 특정 사례에 대한 판례를 나타낸 것인데 전후를 읽어보면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련 분쟁 판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1997. 6. 13. 선고 96나33630 판결 : 확정).

주) 1. 당사자능력이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당사자능력은 당사자적격과 형법상의 책임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송기각의 사유가 되나 책임능력이 없으면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2. 관리기구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과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리기구에 불과하고, 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계좌 거래를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의 회계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신고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관리사무소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7. 10. 선고 95가합12515 판결 : 항소(조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 종업원이고 그 관리사무소가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관리용역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이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4182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카오디오 도난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경위 및 절도범의 침투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비원에게 경비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지법 1998. 12. 1. 선고 98나17496 판결 : 확정).

주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져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차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맹이만 받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밀다가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위 주차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위의 경우,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주·정차행위가 어디까지나 입주인들의 개인적인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아파트 관리회사 고유의 일이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사고장소와 같이 주차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갈 위험이 방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선 비탈길 주위에 차량의 주차나 입주인의 접근 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 안전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먼저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입주민을 대신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 : 상고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다시 선택할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비록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 입주자들에게 유리한지 검토하여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 주는 등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두 가지의 방식 중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존의 전기공급계약 만기시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아파트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세부계획의 수립

과 시행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 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어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유지보수까지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있는 전기기사가 콘도라 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를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12746 판결).

아파트 관리회사의 전기기사가 콘돌라를 작동하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화분대를 떨어뜨려 밑에 있던 사람을 충격, 사망하게 한 사고로 관리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여 준 경우에 있어 전기기사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이유로, 관리소장에 대하여는 법률상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정한 사례(서울민사지법 1993.4.22. 선고 92가합77720 제16부판결 : 항소).

1. 신의칙의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하여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신의칙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여졌다.

2.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의무는 원고, 피고, 대리인, 보조참가인, 증인 등에까지 미친다.

(2)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적용설이 있으나 신의칙의 도입이 건전한 소송윤리확립,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의 조정에 있는 바 선택적용설이 타당하다.

제목: 정보통신부 민원

방금전 정보통신부 C/S 센터 정보보호기획단 김용희님과 통화를 마쳤는데요 첨부한 파일의 내용을 담당자님께 전달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하여서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아파트 홈페이지 같은 비법인 사단(아파트 관리기구 등과 같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운영자 1인(대표회의 회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이 삭제당하거나 아이디가 탈퇴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 관련법이나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이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건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의 한사람인데요 지금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재가입에 대한 규정도 없어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걸 사이버란 특수한 공간상에서 일종의 폭력이며 일방적으로 그 행위가 제한받고 격리당하는 시대적으로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담당자님께서도 속히 내용을 검토하시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와대는 국민들이 쓴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전분류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글도 한번 올려 보십시오. 몇달이면 쓴 글들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저 같은데 그렇게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지난게시판을 아무리 뒤져봐도 게시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말이 되는 애깁니까?

=====

지난게시판에서 몇달 전에 쓴 내 글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나오질 않는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칭찬격려방과 비판질책방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글들만을 골라 사전분류, 게시해 놓았다.

어떻게 이게 나라의 공권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나라에서 부터 이런 사전검열을 자행한다면 아무리 좋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도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며 그 반발력은 더욱 강해질 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제목: "뚝배기"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단지 외부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에만 만족해선 안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극심한 내수경기부진과 부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수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중요한건 우리 모두가 잘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경제활동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모든 이들이란 장애인, 노인, 주부, 저소득층, 자영업자, 회사원 등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모든 이들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외된 사람들(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하다. 이들의 수효만 합쳐도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해 국가전체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들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참여가 어렵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과 함께 소극적인 일자리라도 마련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정부는 실업을 운운하며 의구심만 드는 치적을 포장할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범국가적으로 이들을 경제활동영역에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근데 내 생각으론 정책당국자들이 그네들만의 매너리즘에 빠져 아이디어를 많이 못내고 있는것 같다. 그게 좀 아쉽다.

제목: 대학 서열화 댓글...

물론 대학들이 시험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여러가지 교육정상화 노력을 폄하하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대학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얼마만큼 교육계 내부의 개혁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신중히 반성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십년전과 똑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필답고사가 성행하고 있고 입시와 내신에서 출세우기가 전형요소로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는 다양한 고도 창의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보급으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경험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관리규약 댓글...

정규급여 외에 관리규약에 없는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관리소장 판공비가 예전부터 지불되고 있었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이것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건가요?

좀 전에 관리규약을 보니 28조의 "운영비"에서 회장에게 40만원(업무추진비) 줄 수 있다는것 외에 나와 있는게 없네요. 또 규약 70조엔 이번 CCTV건 공개입찰 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오네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근데 예전에 소장은 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저한테 큰소리 쳤을까요? _ _ _

제목: [펌] 길지만 잘 읽어 보십시오...

진정한 교육개혁 · 행정개혁을 위하여

"개혁 또 실패하면 가난한 21세기 맞는다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정치학

주) 지난 IMF당시 작문된 글로 사료되는데 웹서핑을 하는 도중 발견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이탤릭체 처리했습니다.

100년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세력은 앞을 다투어 동아시아로 몰려왔다. 동아시아의 주요 세 나라, 중국과 일본, 조선은 각각 서구 제국주의의 개항 압력에 직면했다.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 위협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하튼 서구 제국들이 이룬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짧은 시일 내에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즉 근대화 도전이었다. 근대화란 개념은 서양의 개념인 셈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명치유신을 통해 서구의 가치관과 기술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해서 근대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동양 사상의 중주국인 중국과 우등생인 조선은 자신이 왜 변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각자들의 몇몇 시도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한 · 일에 있어 근대사의 영웅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양국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변혁과 근대화를 추진했던 인물들, 즉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등이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반면 우리의 비극은 당시 개혁을 추진하던 개화파들이 모두 천고의 역적이 된 반면 수구파들은 충신으로 지금도 숭상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쓰러져가는 왕조에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한 분들이 영웅시되는 것은 우리의 정서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주변 정세의 대변혁에 적응력을 잃은 부패한 왕조를 붙들고 있던 수구파야말로 나라를 잃게 한 장본인일 수도 있다.

19세기 말 질서의 대변혁기에 유교적 가치관에 깊숙히 빠져있던 우리들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도 우물 안 개구리였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현시점, 동아시아는 냉전질서가 무너지면서 질서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다. 동아시아가 질서의 변혁기에 처한 것은 단순히 동서 냉전이 종결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냉전종결과 함께 「세계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100년 전 우리는 근대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제 100년 만에 또 다른 도전, 즉 「세계화의 도전」이 우리 앞에 닥쳐왔다.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양으로부터의 충격인 셈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의 물결 앞에서 서전(緒戰-첫 경쟁)에 실패했다. 세계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우리는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구축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수개월 사이에 절반 이상이나 까먹고 IMF 관리체제를 받아들여 경제적 주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태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다시 100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세계화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스푸트닉과 광명성

북한은 지난 8월31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비록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이로써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미국과 이웃 나라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덤덤하다. 아니 어리둥절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주민의 10%인 200만명이 굶어죽어가는 판에 무슨 인공위성 타령인가? 여하튼 우리 사회는 별로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이 「광명성」이라고 주장하는 인공위성은 마치 소련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을 연상케 한다. 지금까지 경제·문화·과학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했듯이, 50년대 미국도 소련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섰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소련이 1957년 10월에 발사한 스푸트닉은 전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미국인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미국인들은 과학분야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우선 우주에서 소련을 따라잡기 위해 국립항공우주국(NASA)을 창설했다. 미국은 인공위성에서는 뒤졌지만 최초로 인간을 우주에 올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꿈도 소련인 유리 가가린에 의해 무너졌다. 그 후 미국의 응전은 달로 향했다. 달에 인간을 최초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1969년 달에 인간을 착륙시켰다.

스푸트닉에 의해 자극받은 미국인들은 12년 만에 소련을 완전히 따돌렸다. 30년 전의 돈으로 500억달러가 우주계획에 아낌없이 투자됐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엄청난 과학적 진보와 기술을 축적했다. 소련은 군사적 목적에서 우주개발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우주개발을 통해 얻은 테크놀로지를 어김없이 상용화했다. 컴퓨터, 전자통신, 디지털기술 등 현재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기술은 따지고 보면 달 정복의 부산물들이다.

스푸트닉으로 충격받은 미국은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을 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소련에 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미국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한 것이다. 특히 국방과학법을 제정해 과학연구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흥했다. 이에 따라 과학 교과목들이 전면 개편됐고 교과서들이 다시 만들어졌다. 칠판을 통해 지식을 주입하던 방법에서 실제 실험을 통해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방과학법에 의거해 첫 10년간 150만명의 대학생들에게 낮은 비율로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대학원생들에게는 무려 2만 7000종류의 장학금을 주어 대대적으로 과학연구를 장려했다.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낳고, 빌 게이츠처럼 창조적인 천재성을 지닌 실리콘밸리의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는 교육적 토대가 이 때 마련된 것이다.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긴 했다. 스푸트닉에 의해 촉발된 미국의 교육개혁을 「수입」해온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과학교과서들을 번역해서 우리 고등학교에도 적용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60년대 초 몇몇 고등학교에서 미국방식의 새로운 과학교육이 실험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실험 위주의 교과내용을 실험용 과학기자재가 없는 국내 학교들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결국 칠판을 통한 실험 결과의 주입에 불과했다. 더욱이 미국 것을 번역한 과학 교과서들은 두껍고 무거웠다. 많은 책들을 놓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가방 안에 그런 책을 수용할 여분의 공간이 있을 리 없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행정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중으로 고생만 했다.

세계적 교육투자는 세계적 낭비

단지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새삼 스푸트닉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미국이 기초과학에서 뒤졌다는 것을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제도를 전면 개혁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최소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북한에 뒤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 모두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현행 교육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세계와의 경쟁은 체쳐놓고라도 당장 북한과의 경

쟁에도 밀리는 양상이 초래될 수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 교육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기성세대 모두가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마전 교육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령모개(朝令暮改)식 대응의 병폐를 걱정해서인지, 소리는 요란했지만 그 방향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최근 교육개혁의 기치가 오른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교육 문제로는 우선 입시를 들 수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죽이고 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문제를 같은 학년의 미국학생들이 풀게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도 우리의 평균적인 고등학생 수준은 미국 고교의 상위 5% 이내에 드는 수재들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지식이 산 지식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사물과 문제의 이해력을 기르기보다는 당락을 가르치는 판별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까다로운 입시문제들을 푸는 기술을 학생들이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다. 더욱이 사교육은 완전히 입시 테크닉을 주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화제가 됐던 고액 족집게과외가 전형적인 예다. 결국 죽은 교육이다.

같은 시험문제를 놓고 한국 고교생과 미국 고교생이 시험을 치른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뿐이다. 향후 사회에 나와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과 지식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은 미국 학생들이 훨씬 앞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유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처음엔 미국 학생들의 형편없는 수학실력에 놀란다. 그러나 암기한 공식을 적용해 척척 문제를 풀던 한국 학생은 시간이 가면서 고집스럽게 공식의 원리를 풀어나가면서 해매던 미국 학생에게 밀리기 시작한다. 공식의 원리를 이해한 미국 학생들은 단지 공식을 암기한 한국학생들을 제치고 여러 분야에서 그 공식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 본연의 목적, 즉 인성교육이 도외시되고 있다. 자기만을 제일로 아는 아이들을 양산하고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놀랄 만한 수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다.

사실 우리의 교육투자는 세계적 수준이다. 아마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혹시 학교시설이나 교육여건 등을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공교육비는 약 22조원이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얼마인가? 거의 공교육비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엄청난 액수다. 수많은 학교들과 교직원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주로 과외에 쓰이는 사교육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통계자료는 우리나라의 과외교육비를 11조 9268억원이라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비밀과외 등을 포함하면 20조가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치면 대략 국민총생산(GNP)의 7.5~8%에 달하며, 이는 선진국 평균인 5~7%를 앞지른다.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고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우리나라 가정에 있어 사교육비 부담은 너무 무겁다. 대략 중산층 가정의 평균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수입의 약 15~20%에 이른다는 평가가 있으며, 입시생을 둔 가정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를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보다는 단지 대학입시의 판별력을 기르는 데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이런 돈들이 교원들의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교교육을 알차게 하고, 학교시설과 기자재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면 우리의 교육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로 파행됐는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사회풍토와 깊은 연관이 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일류대에 들어가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대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도 있다. 지금까지 그런 시대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 아니 이미 시작된 세계화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통용될 수 없다.

사실 우리 현대사의 큰 인물들 중에는 대학 출신이 아닌 분이 더 많다. 따지고 보면 우리 대통령도 대졸 출신이 아니고 소를 물고 금강산 구경의 물고기를 뜯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도 대학과는 거리가 멀다. 창의력과 좋은 인성을 갖춘 자만이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교육도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환돼야만 세계화 초전(첫 경쟁)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 씨를 말리는 고시제도

세계화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육개혁과 함께 행정개혁

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조 이래 거의 600년 이상 관료의 나라였다. 관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 출세의 길은 곧 관료가 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사회에 여전히 뿌리박혀 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고시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심지어 의대생, 공대생들도 고시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의 40%가 학과 공부를 핑개친 채 각종 고시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타대학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입시에 의해 파행되고 있는 중고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도 고시에 의해 파행되고 있다.

고시의 병폐는 대학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킨 것에 그치지 않는다. 관에 유능한 인재가 몰리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관에 인재가 편중되기보다는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좋은 인재가 활약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 고시제도에 의해 관료가 된 인재는 다행이겠지만, 그 수십배에 달하는 인재들이 좌절을 맛보거나 수년간 사장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전편에도 지적했던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문제점은 오늘날의 고시제도에도 적용된다. 과거시험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유리된 채 수많은 시험과목을 통째로 암기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고시제도를 통해 충원된 우리의 관료들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 방면에 걸친 전문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한번 합격하면 거의 평생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오늘의 고시제도는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방 이후 정권교체기마다 공무원을 감축해왔지만, 희생되는 것은 비서나 운전기사 등 기능직이나 특채된 공무원이지 고시출신들은 정년이 앞당겨진 이들 외에는 감원되지 않았다. 과거시험만큼이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인재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과 전문성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시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역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MIT의 돈 부시 교수는 한국의 금융위기 원인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관료의 무능이 호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관료들은 금융기관의 자금이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 정책실수로 외환보유고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했다. 관료들은 정치와 결탁돼 있었고, 관료들은 또 경제위기를 속이고 엉터리로 보고했다』 『한국인들의 행동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한국인들은 저축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했다. 그런데도 이런 경제위기를 맞았다면 강간당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 도대체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제공자를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경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관료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한 인사운영이 관건

한국의 관료는 한때 고도성장을 통한 한강의 기적을 연출해낸 수재집단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제 그런 평가는 뒷전으로 사라지고, 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관료주의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곧 관료의 저항에 직면하곤 했다. 바로 「복지부동」이고 「신도불이」다. 관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지표를 제시한다고 해도 이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집권 초기의 사정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관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조선 이래 600년 관료제의 역사상 그나마 유일하게 관료를 제대로 움직인 것은 5·16 쿠데타로 나온 군인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은 권총을 들이대고 관료를 독려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웠다. 그리고 고도성장의 신화를 만들었다. 고속철도가 10년 가까이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완공은커녕 총체적 부실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상황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물론 군사정권식으로 관료를 다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관료만의 잘못은 아니다. 600년 관료주의의 전통 속에서 관료들은 소신을 말하는 것이 금기였다. 조선시대 한때 연로가 트인 적은 있지만 중기 이후 당쟁과 사화를 거치면서 관료들은 점차 소신을 말할 수 없게 됐다. 세도정치(왕의 근친이나 신하가 강권을 잡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가 횡행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관료사회의 전통이 정착됐다. 결국 관료에게는 시기를 기다리며 자신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부동의 노하우가 정착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군사정권식의 강압적 방법으로 관료를 다룰 수는 없다. 우리의 우수한 관료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결국 학연, 지연에 좌우되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전제돼야 한다.

역대 정권들은 언제나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기구를 축소하면 그것이 곧 행정개혁인 양 착각해왔다. 집권 초기에는 수천, 수만의 공무원이 잘리고 기구는 축소된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이르면 어김없이 공무원 수는 집권 당시보다 훨씬 늘어나 있고 정부기구도 확대돼 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가?

사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기되는 「작은 정부」를 말할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선진국들의 경우 과도한 복지로 인해 작은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지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공무원의 절대 수를 줄이는 것은 무리이며, 선진국 수준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오히려 앞으로 상당 기간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할 상황이다.

용두사미는 이제 그만

<<기구축소 문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예를 들어 재경원과 재무부를 합해서 재경원을 만든 일이 실패였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지만, 과거 재무부에는 외환의 적신호를 사전에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국제금융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경원이 되면서 과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분산됐다. 그 결과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해서 경보를 울려야 할 존재가 정부 안에 없었다. >>

연봉 수백만달러를 받는 월스트리트의 국제금융 마피아들이 하는 일에 연봉 2만달러를 받는 우리 관료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지 모른다.

기구축소의 가장 손쉬운 대상이 정부 산하 연구소들인 까닭에, 정권교체마다 각 부처 산하의 연구소들에 대한 통폐합이 이뤄진다. 물론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이 중복된 기능을 갖거나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 대책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구소의 통폐합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기초과학, 자연과학을 다루는 연구소들의 경우, 지식이라는 것은 보고서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소 나름의 노하우도 적지 않다. 그런 연구소를 통폐합하면 오랜 기간을 두고 축적된 무형의 노하우도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들이 과학적 필요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불안해하고 보따리를 챙기다 보면 제대로 연구가 될 리 없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구를 통폐합했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시를 비롯한 총원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살 수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교육과 행정체제를 갖추는 일은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다. 교육개혁, 행정개혁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우리의 모든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의 도덕성과 자기희생이 무엇보다도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집권 초기의 서슬 퍼렇던 도덕성이 중간에 무너져 용두사미가 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청문회가 열리고, 전 집권자가 투옥되는 사태들을 봐왔다.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초전의 실패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21세기를 가난의 시대로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진정한 「제2의 건국」을 기대한다.

제목: ie 5.5 sp2에서 카페 화면이 깨져 보임

카페 주소는 <http://cafe.naver.com/greenapt> 이구요 ie5.5 sp2 에서 화면이 깨져 보입니다. XP에선 제대로 동작하는걸 확인했는데 어제부터 제컴의 ie5.5 sp2 버전에서 <div>태그로 둘러싸인 화면의 태그 5개가 화면을 떠돌아 다니더라구요. 며칠전까지는 카페를 정상적으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두대의 컴퓨터에서 증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제목: 교원평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교원평가 하나만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업지도기법을 권장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 딱딱한 교육과정에 얽매어 있기보다 교사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수업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시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사회의 인재선발방식도 점차 개선시켜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혹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 시도한 여러가지 것들이 시험이라는 굴레 때문에 저평가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제목: [교육] 정부가 이런 의지대로 실천만 해 나간다면...

올릴 문서3.txt

거의 다가 수궁이 가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공교육이 단순한 주입식·시험위주에서 탈피해 평준화를 넘어서 특성화(각종 전문교육 및 특별활동 등), 수준별교육 등으로 발전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고 그러면 나중에 내신이 강화되고 수능이 약화돼도 틀림없이 많은 국민들은 그걸 지지할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런 공교육의 변화만큼 사회의 다양한 인재선발방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요.

제목: 시험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시험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국가자격시험에서조차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서대를 납부해 약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시험을 쳐서 낙방했는데 담번엔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 시험을 치면 원 논 의 시험이 사람이 몰렸는지 더욱 난이도가 어려워지더라는 얘기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국가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일정점수 이상을 넘어야 합격처리가 된다. 이것은 시험의 맹점을 잘 말해주는 한가지 예에 불과하다. 수험생의 처절한 노력을 짓밟고 자신감을 빼앗는 국가자격시험부터 개혁해야 한다. 공단 입장에서 원서대로 돈은 벌지는 몰라도 떨어진 사람만 시험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쉬워진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합격되는게 바로 이런 시험들의 맹점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목: KBS의 시청료 인상에 대하여...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EBS를 비롯해 MBC, 공영방송(KBS)에서까지도 국민(네티즌)을 누X꾼이라고 불려왔는데 이번에 KBS에서 뽀뽀스럽게 시청료를 1500원씩이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0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민생제보(제가 몇번 접수해 보았음)도 접수하지 않고 정치적 보도만을 일삼는 KBS가 시청료 인상을 추진한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KBS 2006년도 수입이 1조 4022억 6300만원 정도 되고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1168억 5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한달에 그 정도 예산을 쓰면서 돈이 모자르다니 정말 방송위원회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망동을 추진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제목: 신문사들의 횡포...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가 생리상 인터넷신문사들의 기사를 퍼다나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경기에다 신문지를 팔지 못하는 기성신문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저질보도가 인터넷 기사를 장식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 포탈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누X꾼 보도가 인터넷기사에 게재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지요. 한마디로 못 먹는 감 찢어나 보자는 심보죠. 제 생각엔 신문사들이 국민(네티즌)들에 대한 무언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구요. 어쨌든 이런 언론매체(특히 동아일보)는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통신회사들의 요금담합 횡포...

현재 우리나라 유선전화 시외 2대역(30Km 이상) 구간의 요금도 지나치게 비싸다. 어떤 부가통신회사(SK텔링크)는 새로운 국번(1599국번)을 개설해 놓고 인접지역(30km이내) 요금으로 2대역 요금(13.8원/10초)을 받아 챙기면서 요금을 청구한 통신사(KT)와 전화번호를 개설한 건설교통부(1599-0001)는 나 몰라라 상대에게 떠넘기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즉 대표번호가 시외전화요금의 과다청구 횡포로 이용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필자가 오늘 실제 겪은 일이며 지금 통신회사, 정보통신부와 협의가 진행중인 일이다. 휴대폰을 비롯한 인터넷서비스, 각종 전화요금도 통신회사별로 다 비슷해서 이런 암묵적인 담합도 제대로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놓고 경쟁이라고 통신회사들 배만 불리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덧글>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도 이제 통화요금이 시내통화 기준으로 39원/3분으로 다른 굴지의 통신회사들과 요금이 비슷해졌다. 물론 인터넷 전화는 시외통화가 저렴하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화품질 등을 고려해 보았을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터넷전화회사와 기존 통신회사들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도 문제고 미래엔 모두가 핸드폰과 인터넷전화를 사용해야 기존 전화회사들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목: 시청료 인상에 대한 국회민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KBS방송위원회가 시청료를 1500원 인상하여 4000원(현재 2500원)에 달하는 시청료요금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제보(제가 몇번 접수해 보았습니다)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정치적 보도만을 일삼는 공영방송이 방만한 경영을 뒤로하고 시청료 인상을 추진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KBS는 2006년도 수입이 1조 4022억 6300만원에 달하고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예산이 약 1168억 5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다 쓰고도 모자르다는 것은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네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HDTV 시설투자의 장래도 현재는 불확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언론과 기존TV 미디어가 새로운 트렌드인 인터넷과 컴퓨터 문화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기존 매스미디어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인터넷회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위한 지원책이 현재로 봤을때 더 절실하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내수경기불황에다 직장인들, 주부, 공무원, 비경제활동인 모두가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더 방송언론에 대한 견제와 미디어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자라는 나무도 너무 비료를 많이 주면 시들듯이 우리 공영방송도 구조조정과 경영의 거품을 제거해 세입세출 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시청료인상안이 자칫 국민의 가계부담을 키우고 미디어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올리는 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제목: 정문공사 글에 대한 댓글...

오로라님, 그럼 그 영구임대 계약서는 관악구청이 가지고 있겠네요? 제가 언뜻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지금의 소음방지펜스를 설치해 주고 계약서는 따로 없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 말로는... 동대인들이 예전에 정문공사로 서명받을 때도 그런 내용(우리 아파트 지분을 매각하거나 임대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없었음)이 없었구요. 그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

계산상으로는 12.82 제곱미터가 나오네요. 구청사람말로는 10~11제곱미터쯤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수치인것 같군요. 아무튼 그 땅은 우리땅인게 맞습니다. 구청사람은 그게 원래 우리아파트 준공당시 도로계획서상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상기(오로라님의 글)와 같은 이유로 난곡휴먼시아의 난곡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땅을 침범한건 분명한 사실이니깐요. 그래서 바닥에 표시도 해 놓았구요. 오로라님이 중요한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목: 기금 지출규모 잘못 표시됐다.

기금 총지출 규모가 370조원이라니 뭐가 잘못된것 같네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지출규모가 257.3조원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금융성·외평기금을 제외한 (60개 기금 중에서) 49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74.5조원이네요. 위에 제시된 금액은 아마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의 여유자금 운용(적립금 운용)과 기타 금융성 지출 등이 포함된듯 보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매우 혼돈스러울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무현의 정책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중에 세금정책으로 공무원들(조직) 많이 늘린 것과 한편으로 사회정책에 많이 공헌한 점이 유달리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두가지는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이 두가지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경제가 파탄났다는등의 일부 일간지들의 악의적인 공세엔 저역시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노대통령의 발언중 홍보처 폐지 반대에 관련한 것인데 새로운 미디어의 3대축 정부미디어/기성언론/개인미디어 는 어떻게든 서로 부대끼면서 비판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